

2019
0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먼
이
국
땅
에
서

임
시
의
정
원
을
세
운



당
신
들
의
노
고
를



기
억
합
니
다



국회보

SINCE 194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Vol. 629, April 2019

[표지이야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0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개원한 날입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정진하는 국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발행일 2019년 4월 1일

발행인 유인태 국회의무총장

편집인 이춘규 홍보기획관

국회홍보출판위원회

한공식 위원장(입법차장)

김승기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위원(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익상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대섭 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위원(기획조정실장)

이용준 위원(법제실장)

이강혁 간사(홍보담당관)

편집실위원회

윤상은(보좌관), 제방훈(보좌관), 최정배(서기관)

편집실무진

글 김중해(취재보도 사무관), 김현아, 고영선, 박민선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상시국회 등 자문결과 발표

“법안소위 활성화로 ‘일하는 국회’ 돼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홍보 열차 운행

‘국회 홍보기능 강화 TF’ 발족

특집_ 임시의정원 100주년, 그 의의와 과제

12 임시정부의 모태, 임시의정원 탄생과정_ 김도형

14 임시의정원, 임시헌법으로 국호와 정부 조직_ 김주용

16 제헌헌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_ 이현주

18 임시의정원 정신의 계승을 위하여_ 이종찬

20 위원장 초대석_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함께 행복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22 길에서 길을 찾다_ 박대출 의원

천년 역사의 문화예술 도시, 진주

26 칭찬합시다_ 최도자 의원

보육 외길 30년, “보육문제 해결 위해 땀 것”

28 나의 애송시_ 위성곤 의원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풀





- 30 나의 인생 나의 정치_ 유성엽 의원
“경제난의 원인 밝혀 위기의 대한민국 살리는 데 주력”
- 32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동물복지, 한일관계, 국민연금 등 주제로 포럼·토론회 열려
- 36 법률 시대를 읽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_ 임익상
- 38 주재관 리포트
프랑스 하원의 윤리 준수 향상을 위한 제안_ 김정연
- 40 법 시행 현장을 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 42 만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44 위원회는 지금
국회, 미세먼지 대책 등 논의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50 따끈따끈 새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0건 의결
- 52 국회 뉴스
- 60 임시의정원 사람들
태평양회의의 참석을 추진한 제3대 의장 홍진_ 한시준
- 63 국회스케치
- 64 경제이야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과 판매 수수료_ 이진우
- 66 취재수첩
‘일하는 국회’의 8할은 소위원회_ 김하늬
- 68 미래과학을 읽다
내 마음대로 모양 바꾸는 디스플레이_ 고호관
- 70 오천년의 숨결, 우리 유물을 찾아서
신운복의 ‘월하정인’_ 이광표
- 74 역사 속 길을 찾아
청주 무심천 꽃길과 용화사 삼불전_ 장태동
- 78 생활 속 우리말글
‘가을걷이’와 ‘설거지’, ‘까불이’와 ‘떠버리’_ 김미형
- 79 그때 그 사건
1969년 4·8항명과 3선개헌
- 80 정치 관련 주요 일지
- 82 편집 후기
임시의정원 100년의 미래_ 이춘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상시국회 등 자문결과 발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방안 마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혁신자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가 지난 3개월여 동안의 제2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3월 7일 제2기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제2기 혁신자문위(2018년 12월~2019년 2월)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활동했다.

총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1기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집무실에서 제2기 혁신자문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 소수지령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제2기 혁신자문위 활동은 입법부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월에는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실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3기 혁신자문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유인태 국회의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히 권고사항 중 기본이 되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착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제3기 이행점검단계로 들어가 그동안 제

시한 자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면서 혁신자문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친 진단과 함께 국회운영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지난 제1기 혁신자문위(2018년 9월~11월)는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국회정보공개제도 개선, 윤리특위 징계의결시한 신설 등 3개 분야(제도, 예산, 인사·조직) 19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 상설소위 의무화 및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으로 제출돼 심의 중이며, 의원외교의 체계화 및 활성화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

“법안소위 활성화로 ‘일하는 국회’ 돼야”

문희상 국회의장, 행정안전위·기획재정위·정무위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국회 사랑제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협치를 독려하고 위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외교통일위원회(1월 24일), 국회운영위원회(1월 31일), 국방위원회(2월 7일) 소속 위원들과도 오찬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행안위, “상임위 활성화로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이하 상임

위)가 활성화되어야 ‘일하는 국회’로 바뀔 수 있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며 “법안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활성화 차원에서 법안소위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환으로 상임위 활성화가 실력국회,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로 연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최하위인데, 최상위가 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국민 신뢰를 1%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24일째 ‘미세먼지 나쁨’이다. 국민건강 불안, 야외활동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조치를 한



3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국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소홀했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회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3월 11일 행정안전위를 통과해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법안이 너무 많이 밀려 있다. 법이 많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인재근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익 간사(자유한국당), 이진복·김한정·유민봉·권미혁·윤재옥·김영호·김병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1%라도 올리는 것”이라며 “국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법안소위 정례화 등 국회개혁 성과 내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 “법안소위 정례화를 제도화 하는 안이 국회운영위에 가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것마저 처리가 안 되면 국회가 국민에게 외면을 받을 것이다.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율이 40%에 육박해 평균보다 높다. 그러나 여기도 다루지 않은 법안이 900건이 밀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별 오찬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한 위원회는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기획재정위가 계속 앞서가기를 바라며, 성숙한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여야의 전문성 있고 실력있는 분들이 저희 위원회에 계신 것을 알고 있다. 더욱 분발해 모범 상임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정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



3월 19일 정무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정우 간사(더불어민주당), 추경호 간사(자유한국당), 김성식 간사(바른미래당), 유성엽·박영선·이원욱·심재철·유승희·조정식·김정호·강병원·이종구·심재철·김광림·최교일·심상정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무위, “의원외교 활동시 단 1원도 다 공개하기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19일 정무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저는 국회 신뢰도를 단 1%라도 올려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국회개혁에 관한 안을 냈고 지금도 추진 중”이라며 “대표적인 것을 들면 법안 소위 활성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를 매 달이 아니라 매주 한 번씩 열어 국회 전체에 계류된 1만2천여 건의 밀린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 강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개선, 인사청문회 개선 등 국회 개혁과 관련해 다룰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 “의원외교 활동시 가장 큰 원칙은 투명성”이라면서 “단 1원도 다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외교 활동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다. 국회의장과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성과, 타당성 평가 기준도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또 “각 의장단,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단, 간사단 등의 협조 덕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요즘처럼 국회의장이 ‘극한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드물다.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민병두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석 간사(자유한국당), 유의동 간사(바른미래당), 유동수·이학영·장병완·성일종·김성원·전해철·고용진·전재수·김병욱·지상욱·최운열 위원 등이 참석했다.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홍보 열차 운행



3~4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내부에 부착된 임시의정원 광고. 임시의정원 홍보 열차는 4량 중 1량에 설치돼 있으며 1시간에 1대 운행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1919. 4. 10) 100주년을 맞아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지하철 9호선 열차 내부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광고’를 실시한다.

열차 내부 전체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탄생했던 당시 중국 상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꾸미고, 임시의정원의 주요활동을 소개하는 자료를 배치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를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국 상해 프랑스로거에 설립됐다.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으며,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4월 10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개최

국회사무처는 지하철 광고를 시작으로 4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헌정기념관 전시실에서 ‘기념 특별전’, 국회잔디광장에서 ‘국회 개방행사’ 등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알리는 다양한 전시·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국회 홍보기능 강화 TF’ 발족



3월 26일 국회에서 '국회 홍보기능 강화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3월 13일 국회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 홍보기능 강화 TF’(이하 TF)를 구성했다. TF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동안 강조해 온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의 일환으로, 입법활동 등 국회 본연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TF는 김수홍 국회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의사국장 등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국회 혁신 및 국회 운영, 상임위원회에서 논

의되는 정치·정책 현안 등 국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홍보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TF는 언론의 정보요청에 정확하고 빠르게 응하는 한편, 국회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고 국회에 대한 오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 전달을 통해 ‘투명한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특집

임시의정원 100주년, 그 의의와 과제



임시정부의 모태, 임시의정원 탄생과정 김도형 연구위원

임시의정원, 임시헌법으로 국호와 정부 조직 김주용 교수

제헌헌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현주 학예연구관

임시의정원 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이종찬 이사장

임시정부의 모태, 임시의정원 탄생과정



김도형 연구위원
독립기념관

임시의정원은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중국 상해 프랑스조계에서 성립됐다. 임시의정원은 ‘국회’나 ‘의회’와 같은 대의기관이나 입법기구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원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볼 때, 임시의정원은 보통 국가의 대의기관이나 입법기구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임시의정원은 3·1운동으로 수립된 임시정부의 모태이며, 임시정부와 더불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했던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이었기 때문이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명의로 모든 한국민의 열망을 모아 독립국임과 자주민을 선언했다. 독립을 선언한 후 독립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해 국내외의 독립운동가 29명이 중국 상해에 모여 임시의정원을 설립해 임시정부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 독립운동가들, 상해 프랑스조계로 모여들다

3·1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국내외 각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해로 집결했다. 상해는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모여 사는 국제도시로 독립운동을 펼칠 수가 있었다. 특히, 일제의 감시가 미칠 수 없는 각국 ‘조계’가 형성되어 있어 독립운동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최적지였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동녕·이시영·조완구·조성환·김동삼·조소앙, 일본에서 2·8독립선언을 준비하였던 이광수·최근우 등 많은 인사들이 상해에 집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3·1운동을 외부세계에 알리기 위해 현순을 중국 상해로 파견했다. 현순은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3·1운동 발발 소식을 국외에 알리는 동시에 이를 확대시켜 국내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자 했다. 그는 천도교 측에서 제공한 독립운동 자금 2천 원을 가지고, 프랑스조계 보창로 329호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독립임시사무소에서는 독립선언서를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해 준비하고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기다렸다. 3월 4일 마침내 중국에서 발행되던 영자신문 ‘차이나 프레스(China Press)’에 한국민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국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의 소식을 파리평화회의, 프랑스·이탈리아·영국·오스트리아·벨기에·중국 6개국 대표에게 전보로 발송했다. 샌프란시스코와 호놀룰루에 있는 대한인국민회에도 3·1운동의 소식을 알렸다.

국내에서 독립을 선언한 이후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본격적인 논의는 국외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해에 모인 인사들은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했으니 정부를 세우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의가 진행될 때, ‘정부’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정당’을 조직할 것인가로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의 대세는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정부’를 세우자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을 조직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을 무렵, 현순과 이광수는 국내 인사들의 의견도 반드시 들어보아야만 한다고 했다. “독립선언을 했으니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의사를 들어보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광수는 천도교계 청년 이봉수를 국내에 보내 그들의 뜻을 알아오게 했다.

3·1운동을 전후해 상해에 모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임시정부 조직을 준비하고 있던 중, 독립임시사무소 총무 현순이 1919년 3월 29일 전보로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하는 ‘임시정부 조직안’을 처음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와 하와이지방총회에 알렸다. 이것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임시정부안이지만, ‘노령정부안’으로 잘못 알려졌고 미주에서는 ‘대한공화국 정부조직안’이라고 불렸다.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 임시의정원을 성립시키다

1919년 4월 10일 오전 10시 프랑스조계 김신부로에 30명 정도의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모인 인사들은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상해를 떠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자 3·1운동 당시 학생 대표였던 한위건이 “못 나갑니다. 정부 조직이 끝나기 전에는 한 걸음도 이 방에서 못 나가십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수많은 남녀 동포들이 피를 흘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동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밤이 아홉이라도 이 자리에서 정부를 조직하시고야 말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임시정부를 조직할 것을 요구했다.

4월 10일 밤 10시 프랑스조계 김신부로에서 국내의 독립운동가 29명이 모여 회의가 열렸다. 개회 벽두에 회의의 명칭을 정했다. 조소앙의 동의와 신석우의 재청으로, 회의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으로 결정했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임시의정원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 서기에 이광수·백남철을 선출했다.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가장 먼저 국호와 관제를 결정하고 국무원의 구성원을 선출했다. 국호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임시정부의 조직체계는 총리제로 하고, 국무원의 수반인 국무총리로는 이승만을 선출했다. 그리고 각부 총장과 차장을 선거하고, 10개조로 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가결했다. 다음 날 4월 11일 오전 10시 임시정부의 조직을 완료하고 감격적인 만세를 부르고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끝이 났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에 성립돼,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인적 자원 확보와 충원, 의회 중심의 정부 운영, 민족의 대표기구이자 독립운동의 중추기구로서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

임시의정원, 임시헌법으로 국호와 정부 조직



김주용 교수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3·1독립선언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모 방송사에서는 독립선언서 대국민 낭독 이벤트를 연일 화면으로 송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호가 정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정부조직이 태어났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창출했던 ‘임시의정원’,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되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아래 생활한다.

임시헌장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명시

1919년 4월 10일 늦은 밤 중국 상해 김신부로 독립사무소에서는 대한민국의 국호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임시의정원이 조직됐다.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진행은 먼저 간부 선출 순서에 따라 의장 이동녕, 부의장 손정도, 이광수와 백남철을 서기로 선출했다. 치열한 논의 끝에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했으며, 정부 수반으로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선출해 국민국가의 기본적인 골격을 짰다. 가장 중요한 헌법(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임시의정원은 임시헌장 10개조를 제정했으며, 제1조는 오늘날 헌법 제1조 1항과 같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제국주의에서 독립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으며, 그 국호를 제정한 것이 바로 임시의정원이었다. 그 감격에 찬 첫걸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공동운명체로서 부침을 거듭하게 됐다. 그 과정은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성립시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선구자들의 고단한 삶의 여정과 동일했다.

임시의정원은 상해에서 국호와 정부를 조직한 후 새로운 통합을 위해서 헌법 개정과 정부 개조를 위해 정부 측에서 제안한 대통령제 심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것은 바로 1919년 9월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거듭났다. 이 과정에서 국



무총리제였던 정부조직을 대통령제로 바꾸고 초대 임시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했다. 하지만 그가 상해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대통령 임명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는데 결국 의정원 의장 명의로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을 공표하면서 문제는 일단락됐다.

임시의정원에서는 이승만에게 정부 유지 방안 제시 및 상해 부임을 촉구했고 그는 1920년 12월에 상해에 도착했다. 상해 한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성원과 기대가 컸지만 이승만은 이를 뒤로하고 별다른 성과없이 다음해 5월 미국으로 돌아갔다. 내부 모순이 폭발해 결국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으며,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는 진통을 겪었다. 임시의정원에서는 다시 이승만의 상해 부임을 촉구했지만 응답이 없었으며, 1925년 임시의정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박은식 대통령대리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다음 개헌을 단행하는 등 임시정부의 모습을 가다듬으려고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임시정부는 1920년대를 관통하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다. 내부 문제와 갈등으로 임시정부 조직이 축소되면서 침체국면에 처했던 임시정부는 1930년 11월 8일 개최된 의정원(이동녕 의장)에서 이동녕을 국가주석, 김구 재무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이 시기 임시정부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으며,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는 그 상징적인 쾌거였다. 하지만 윤봉길 의거 이후 임시의정원은 고난의 이동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1932년 5월부터 임시의정원의 항주시대가 개시됐다. 그다음 해에는 제25회 임시의회의에서는 석오 이동녕 의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국무위원을 선출했다. 선상에서의 토론회도 개최할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도 임시의정원에서는 1934년에 이동녕 의장 후임으로 송병조를 선출했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다. 양기탁을 임기 3

년의 국무회의 주석으로 선출했으며, 내무장 조소앙, 외무장 김규식, 군무장 윤기섭 등이 선출됐지만 조소앙 등이 사의를 표하면서 임시정부의 내각 역시 불안정한 상태였다.

진강과 장사, 광주와 유주를 거쳐 기강에 도착한 임시의정원은 193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임강가(臨江街)에서 정기의회를 개최했으며, 이때 홍진을 의정원 의장으로 선출해 예산안을 추인하고 임기가 만료된 국무위원을 개선했다. 홍진 후임으로 김봉준이 선출됐으며 기강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중경으로 이전했다.

1940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중경에 안착했다. 상해를 떠나 8년 동안 고난의 장정을 마치고 다소나마 안전한 곳인 중경에서 가장 활동적인 임시정부의 역할을 수행했다. 1940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약헌 제4차 개헌이 공포됐으며,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가 주석에 선출됐다. 다음해 11월에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발표했으며, 12월 10일에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기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으로 편입되면서 군사적으로 좌우통합을 달성했다.

그해 10월 임시의정원에 조선민족혁명당 등 좌파 14명이 의원으로 선출돼 실질적인 정치적 통합도 이루어졌다. 이때 임시의정원은 명실상부한 최고 의결기관이자 대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중경에서의 5년간 임시의정원은 오늘날 국회와 같이 각종 법안을 심의했으며, 특히 국토 광복 후 ‘광범한 민주주의적 기구’를 창출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갈등과 충돌이 상존했지만 끊임없는 토론과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제헌헌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987년 10월 29일에 개정되고 이듬해 2월 25일에 시행된 현행 헌법은 전문의 첫머리에서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하략)

그렇다면 제정 이후 8차례에 걸쳐 헌법이 개정되는 동안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은 언제부터 포함됐을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해산됐다. 한국민주당(한민당)은 무소속으로 당선된 자당 의원들을 비롯해 다른 의원들을 포섭, 80여 석으로 최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5월 31일 국회 개원으로 헌법 및 각종 법률제정, 정부구성 임무를 담당할 임기 2년의 ‘제헌국회’가 출범해 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김동원을 선출했다.

6월 1일에는 30명의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해 서상일(한민당)을 위원장, 이윤영(독촉국민회)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유진오(고려대 교수), 권승렬(미군정청 사법부 차장) 등 10명의 전문위원을 임명했다. 헌법기초위원회는 유진오 안(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6월 20일 헌법 초안을 작성했고 7월 12일까지 독회를 마쳤다.

헌법안 심의의 첫 쟁점은 국호였다. 독촉국민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주장했으나 한민당은 ‘고려공화국’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표결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으로 결정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의미였다.

가장 큰 쟁점은 권력구조였다. 헌법초안은 대통령이 임명



이현주 학예연구관
국가보훈처



하고 민의원의 승인을 받은 국무총리에게 내각회의 의장으로서 내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각원의 선택권과 파면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총리가 내각을 지배하는 내각책임제를 규정했다. 내각책임제는 한민당의 당론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민당과 더불어 헌법제정권력의 한 축인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원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신생 대한민국에 대통령책임제가 적합하다고 발언했고 6월 21일에는 헌법기초위원회에 출석해 “(내각책임제) 초안이 헌법으로 채택된다면 이 헌법하에서는 어떠한 지위에도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국민운동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민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 수정헌법 초안이 통과됐다. 한민당으로서는 김구와 김규식에 이어 이승만마저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약체 정부가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자신들이 뒤집어쓸 것을 우려했다.

헌법 초안 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언급은 없었다. 1948년 7월 1일 국회 본회의 헌법안 제2독회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헌법안 제1조의 조문심의를 시작되자마자 중단하여 새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삽입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문안까지 제시했다. (제헌국회속기록(1) 제1회 제22호(1948. 7. 1))

이에 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 의원이 거들고 의원들도 동조하자 국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민은 3·1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로 돼 있던 헌법안의 전문 서두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로 수

정했다.

제헌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 명문화된 것은 역사적 의의와 함께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김구와 김규식, 중간파 등 임시정부 주류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회가 임시정부의 인맥을 계승하지 못했고 임시의정원의 맥을 잇는 데에도 실패한 상황에서 임시정부의 정신이라도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¹⁾

이승만으로서도 5·10선거에 불참한 김구와 한국독립당 계열을 견제하는 한편 임시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였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국회 본회의 제3독회,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정부조직법 심의가 끝나고 7월 17일 헌법 및 정부조직법이 공포됐다. 제헌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하략)

제헌헌법이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건’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독립운동 세력이 참여하는 새 정부의 수립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8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 조문이 제헌헌법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

1) 국회 개원 직후 김구는 제헌국회에 대해 “현재 의원 형태로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서울신문, 경향신문 1948년 6월 7일자).

임시의정원 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이종찬 (재)우당 이회영 장학회 이사장
제 11, 12, 13, 14대 국회의원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전 세계는 엄청난 전쟁의 참화로부터 많은 반성의 소리가 일어났다. 더 이상 약육강식의 패권의 시대는 허용해서는 안 되고, 세계의 보편적 평화를 위해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는 청산해야 하고, 민족자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담론이 일반화했다.

이런 전 세계를 풍미한 주장을 신흥제국인 일본은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반대로 전승국의 일원이라는 알팍한 계산으로 기울어져 가는 청국을 상대로 영토 확장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일본에게 군사적으로 강점당한 이후 피로써 저항해온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세계의 소리를 먼저 들었다. 그리고 각지에서 잇따라 독립을 선언했다. 나라의 자주독립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은 “동양평화를 보장하고 인류평등을 실시하기 위한 독립”(1919. 2. 1 ‘대한독립선언’)이라 천명했고,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할 것”(1919. 2. 8 ‘2·8독립선언’)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온 세계에 우리 민족의 빛나는 문화를 맺게 할 것”(1919. 3. 1 ‘3·1독립선언’)이라 다짐했다.

이런 독립선언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4월에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4월 10일 오후 10시에 국내외에서 상해에 도착한 29명의 대표들이 회의를 개최했고, 다음날인 11일 아침 10시까지 속개하면서 국호와 헌장 그리고 정부조직 및 각료까지 모두 의결했다.

그날의 회의록을 보면 실로 경탄할 일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29명의 의원들의 평균연령은 36.5세, 최고령자는 이회영 53세, 최연소자는 23세의 최근우였다. 일부 유학생 출신들도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터인데 대단히 능숙하게 회의를 진행했다. 동의를 하면 재청, 3청을 하고 의제가 채택이 되면 토론을 하고 가부 표결하는 그 절차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배웠으면 싫을 정도였다.

첫 번째 국호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25세의 신석우가 대한민국으로 동의했고 이한근이 재청했다. 그러나 여운형은 “대한이란 말은 왕조 말,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니 부활시킬 필요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신석우는 다시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며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대한민국’ 국호가 결정됐다.

사실 ‘대한’이란 용어는 일제가 금기시했다. ‘조선’은 외세의 영향하에 있었지만 대한제국은 어쨌든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제가 굳이 ‘조선총독부’라 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다. 그러므로 대한이란 용어를 쓰면서 ‘제국’에서 ‘민국’으로 변용된 것은 의미가 있다. 민국이란 말도 이미 조소앙이 ‘대동단결선언’에서 경술년 융희(순종)가 일제에게 주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넘겼다는 이론을 펼쳤기 때문에 당연하게 결정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1948년 제헌국회에서 이승만 초대 의장이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밀어붙인 것도 임시의정원의 국호 채택 정신을 따른 것으로 본다.

지금의 ‘국회’ 명칭은 이미 임시의정원에서 결정

둘째, 제1조, 민주공화정으로 한다는 것도 당시로서는 대단한 결정이었다. 민주공화정을 독립운동가들이 일찍부터 바라기는 했지만 당시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종의 붕어, 그 인산(장례식) 날 3·1 독립선언이 이뤄져 대다수 국민들은 그제야 왕정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았고 대안으로 민주공화정이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은 1919년부터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셋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 10개조는 간단하면서도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제2조는 임시 정부는 임시의정원에 의해 통치함을 말한다. 즉 입법부 우위를 강조했다. 우리 헌법도 제헌국회부터 3공화국까

지는 국회가 정부 앞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서 국회는 정부 뒤에 한참 밀려 있었다. 1987년 헌법을 개정해 비로소 제3장이 국회이고 제4장이 정부로 다시 환원됐다. 그러므로 임시의정원의 정신에 의한다면 입법부의 우위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제 타령이나 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정당의 시녀로 전락했고 모든 정부운영이 유신이나 5공시대 행정부 우위 관습에 빠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입법부의 독립적인 기능 재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음 임시헌장 제3조 특권계급의 부인, 제4조 기본권에 대한 규정, 제5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규정, 제6조 교육·납세·병역의 의무, 제9조 생명형·신체형·공창제 폐지 등을 볼 때 이는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인 평등, 자유, 인권 그리고 국가의 의무를 모두 정의했다. 이 역시 혁명적이다.

제7조는 독립선언의 정신, 즉 세계평화와 인류문화발전에 기여함을 정의했고, 이를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할 것을 못 박았다. 다음 제8조 구황실 우대 조항은 임시의정원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왕정에서 국민주권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의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임시의정원에서도 이 조항이 영구히 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 제10조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 즉 일제로부터 국토가 회복된 후, 1년 내에 정식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에 모든 사항을 인계한다는 의미다.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뺏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국토를 점령했을 뿐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뿐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그리고 오늘날 ‘국회’라는 명칭도 이미 임시의정원에서 결정한 그대로 남아 있다. 이로 미루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장선에 있음이 분명하다. 📌

“함께 행복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는 주로 나라살림을 맡고 있다.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예산과 세제 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국가 재원을 조달하는 국세청·관세청, 물가안정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등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을 때 정성호 위원장의 첫 일성은 ‘민생과 경제’였다. 정성호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데 여야 의원님들의 견해가 다르지 않다”면서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를 위원회 운영의 기본으로 삼고, 특히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을 늘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길잡이로 나선 정성호 위원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들어 보았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위원장은 1949년 민주국민당 홍성하 의원이 재정경제위원장에 당선된 이래 70여 년 만에 나온 첫 진보 정당 출신 재정분야 위원장이다. 그동안 보수진영 정당이 맡아 온 재정분야 위원회에 진보진영 위원장이 선출되어 화제를 모았다. 정성호 위원장은 자신을 ‘실용주의자’라며 “삶에 이로운 정치와 함께 행복한 경제를 실현하고 싶다”고 했다. 현 경제 상황을 두고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렇수록 위원회가 민생 살리기와 경제 활력에 더욱 매진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는데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입니다. 일자리 성과는 부진하고 소득

격차는 확대되고 있어 기재위원장으로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최저임금 문제 등 갈등요인이 많았지만, 올해는 경제주체가 합심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해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을 비롯해 208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미진했다며 아쉬워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하지만 위원회에 역량 있는 위원들이 많아 예년보다 많은 민생관련 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에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G 투자세액 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 현실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치로 저소득층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을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 등을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수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 증권거래세 조정,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개선해 지역 균형발전 이루어야

국회에서 경제관련 상임위 화두는 거의가 경제 살리기와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대비로 모아진다. 정성호 위원장은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민관이 합심해 경제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며 “작년에 부진했던 민간투자와 건설투자의 활성화를 비롯해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과 신산업 육성 등 경제정책이 이제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예타제도는 당위성이 있습니다만, 비용·편익분석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지역 균형발전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국책사업을 비용·편익만으로 평가하면 도시지역이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지방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면치 못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타 개선안을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성호 위원장은 “‘2019 경제정책방향’은 ‘민생·활력·혁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며 “이 세 키워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막혀 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물꼬를 트고, 공유경제 등 신산업과 서비스업 시장창출을 위해 오랫동안 ‘목에 걸린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우리 정치의 화두 중 하나인 ‘협치’를 강조하면서 “국회는 합의제 기관인 만큼 법률안 처리 등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려면 대화와 타협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여야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해야 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며 나의 얘기보다는 상대의 견해에 귀 기울이는 경청이 먼저입니다. 원내 차원에서 그리고 위원회 차원에서 여야가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정치현안에 따라 정책의제가 서로 엉키고 국회 운영이 마비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여야는 대화를 통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상대의 듣기 싫은 발언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당들이 정치와 정책을 분리해서 대응했으면 합니다.”

정성호 위원장은 인터뷰를 마치며 “경제는 심리이자 현실”이라며 “모든 경제주체가 배제되지 않고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가운데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문제가 경제에 역효과로 나타난 것은 뼈아픈 경험”이라 했다.

앞으로 카풀 등 공유경제와 향후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우리 사회는 수많은 이해관계를 풀어가야 하며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국회가 앞장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하는 숙제를 국회가 안고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위원장은 “여야 정치권이 당장의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고 정치적,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며 말을 맺었다. 📍

글. 김중해 사진. 김지범



족석루



천년 역사의 문화예술 도시, 진주

박대출 의원

자유한국당, 경남 진주시갑

꽃소식이 남풍에 실려오길 기다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만화방창(萬化方暢), 꽃을 즐기는 계절이다. 인디언들은 4월을 일러 '생의 기쁨을 느끼는 달'이라고 했었는데 우리 또한 4월은 청명과 곡우 절기가 들어 있어 '만물이 소생하는 달'로 그들과 다르지 않다. 먼 산 풍경이 하루하루 달라지는 계절에 천년의 역사와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 지금은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진주 시에서 박대출 의원을 만났다.



도시나 지역을 떠올리면 후렴처럼 따라붙는 명소가 있다. 진주는 축석루와 진주성이다. 누구라도 진주를 가로지르는 남강 벼랑 위에 우뚝 솟은 축석루를 바라보면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이라는 말에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박대출 의원은 축석루를 두고 “‘조선 제일’이라 해야 마땅하지만 겸손한 진주 사람들이 영남 제일로 낮춘 것 같다”며 웃었다. 진주성은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축석루는 미국 CNN이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장소’로 여러 차례 선정한 바 있어 이제는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

“축석루는 누각으로도 아름답지만 전시(戰時)에는 진주성을 지키는 남장대(南將臺)로 지휘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평화의 시절에는 시인 묵객들이 풍류를 즐기고 과거를 치르던 고시장이기도 했지요. 어릴 때부터 진주성은 소풍가는 단골 장소여서 무던히도 뛰어놀던 추억 어린 곳입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애국애족과 민족 그리고 호국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진주성 덕분입니다.”

예로부터 진주를 충절의 고장이라 부르는 데는 임진왜란 때 치른 두 번의 진주성 전투가 있다. 한 번은 김시민 장군과 3천800여 민관군이 왜군 2만여 명을 크게 무찔러 임진왜란 3대첩(진주대첩·한산대첩·행주대첩)의 하나로 불리는 영광이, 또 한 번은 10만의 왜군이 재침해 성안의 모든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쓰라림이 있다. 왜장을 유인해 남강에 몸을 던진 의기





중앙시장에서



진주에 조성 중인 항공산단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박대출 의원

(義妓) 논개는 진주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성안에는 논개를 모신 사당인 의기사, 김시민 장군 전공비, 진주성 임진대첩계사순의단 등 진주성 전투와 관련된 유적이 많다.

진주의 먹거리 그리고 최초의 지방종합예술제인 개천제

진주는 청정해역 남해바다와 지리산이 인접해 예로부터 먹거리가 풍성했다. 북에는 평양, 남에는 진주로 일컬어지며 풍성한 멋과 맛을 자랑했다. 그중 진주 육회비빔밥과 진주냉면은 역사 문헌에도 나오는 등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박대출 의원은 “진주냉면은 우리나라 3대 냉면 중 하나로 예전에는 ‘북에는 평양냉면, 남에는 진주냉면’이라 했을 정도로 유명했다”며 “육회를 넣은 진주비빔밥은 연원이 전투식량으로 양은 많지 않지만 먹고 나면 든든하다”고 자랑했다. 서울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주냉면은 이병주의 소설 ‘지리산’에도 나오고 허영만 화백의 만화 ‘식객’에 등장한다.

진주는 먹거리와 더불어 축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축제 중 하나인 진주 남

강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진주성 전투 당시 성 밖의 의병과 연락하기 위해 군사적 신호로 풍등을 날리고, 남강에 등불을 띄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이 축제로 이어져 매년 국내외 관람객만 300만 명이 모일 정도로 국내 최대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진주 소싸움은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억압된 울분을 발산하는 놀이가 되어 소싸움이 있는 날은 남강 백사장이 모래먼지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진주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어 누구라도 한번 찾으면 다시 오고 싶은 고장이라 자부합니다.”

1949년에 정부수립 1주년을 기리면서 시작된 ‘개천예술제’는 우리나라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다. 진주시는 진주 논개제, 진주 탈춤마당 등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공예·민속예술 창의 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21세기형 산업문화도시를 꿈꾸는 진주

진주는 풍부한 공업용수와 사통팔달의 교통망, 그리고 관내 7개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진주를 “항공·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경남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진주에 조성 중인 항공우주산업단지(항공산단) 현장으로 향했다.

“항공산업은 기계·전자·소재·ICT 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입니다. 항공기 1대 수출은 자동차 1천 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글로벌 경쟁력으로 보면 3년 이내에 우리나라 주력업종 8개 중 선박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인 항공산업은 진주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항공산단 조성을 위해 시민 공청회까지 열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박대출 의원은 “항공산단은 서부경남은 물론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클러스터 조성과 기업유치는 물론 복합비즈니스센터 신축으로 항공산업육성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진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확정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지역의 오랜 염원이자 지난 총선 때 박대출 의원의 1호 공약이기도 했던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진주는 경제와 문화관광 등에서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주라 천리길’이 지척이 될 날도 머지않았다.

기자 출신인 박대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꼼꼼히 챙겨 ‘정치를 기자처럼 한다’는 평을 받는다. 지역구 현안은 물론 국가적인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데 반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정부가 직접 가짜뉴스를 숙아내고 공권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인터뷰를 마치며 “말보다는 발로 뛰고 일로 성과를 내는 정치, 정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며 임시국회가 열린 여의도의 사당으로 향했다. 🍷

경남 진주시 / 글. 김종해 사진. 김지범



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인 진양호 전경



김명연 의원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보육 외길 30년, “보육문제 해결 위해 떨 것”

지난달 국회보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이었던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다음 주자로 최도자 의원을 추천했다. 김명연 의원은 최도자 의원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쟁점이 많은 위원회지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중간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율을 잘하신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보육 전문가로서 보육인에 대한 처우와 정부 평가제도의 개선에 힘쓰시는 분”이라며 “따뜻한 리더십을 갖춘, 능력이 출중한 의원”이라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김명연 의원에 대해 “과찬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31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 전문가’로 알려진 최도자 의원은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최 의원은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운영했지만 교사나 학부모들과 갈등을 겪은 일이 손에 꼽는다. 평소에도 화합과 협치를 중시하는 편”이라며 “거대 양당 사이에 있는 바른미래당 간사지만 위원회 안에서도 최대한 화합하고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아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제20대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속성장을 이뤄냈지요. 그런데 그에 따른 성장통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소득양극화, 경쟁주의, 복지 사각지대 같은 문





제들이지요. 제대로 된 복지체계를 구축해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이 시대의 최대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 없이 저출산 문제 해결 어려워”

최도자 의원은 30년 넘게 보육현장을 지켰던 만큼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보육현장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에 반영되고, 우리 보육시스템이 선진국 못지않게 탄탄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에도 국회사무처가 뽑은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그는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영유아 수가 현격히 감소하여 법인어린이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

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 보육정비심사위원회를 통해 잔여재산 귀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데, 법인재산 활용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실제 해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최도자 의원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3~5세 연령대의 영유아는 보통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닙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다니는 시설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죠. 시설 간 격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현 정부 들어 중단됐습니다. 최근 유치원 사태 등 유아교육과 보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둘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혜숙 의원을 칭찬합니다

최도자 의원은 다음 칭찬 주자로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을 추천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경북약사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최도자 의원은 전혜숙 의원에 대해 “약사 출신이시라 그런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때 보면 정확하게 핵심을 찌른다”며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할 줄 아는 겸손한 분”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일 때는 가깝다가도 여당이 되면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신데, (전혜숙 의원은) 당과 관계없이 항상 가깝고 친근한 분입니다. 궁금한 점을 물으면 항상 친절하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시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결같고 변함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 꾸미지 않은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국회의원입니다.”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풀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1921~1968)

서울 종로에서 태어났다. 선린상고를 거쳐 도쿄상대에 입학했으나 학병 징집을 피해 만주로 이주하기도 했다. 8·15광복과 함께 귀국한 뒤 예술부락에 '묘정(廟庭)의 노래'를 발표하며 등단한 후 김경린, 박인환과 함께 시집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을 출간했다. 1959년에 첫 시집이자 생전에 발간한 유일한 시집 '탈나라의 장난'을 출간했다. 4·19 혁명 이후 현실과 정치를 직시하는 시, 시론, 시평 등을 잡지와 신문 등에 발표해 대표적 참여시인으로 평가받는다.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풀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서귀포시

“시작(詩作)은 머리로 짓는 것이 아니고, 심장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1960년대 참여시인으로 유명한 김수영 시인의 말이다. 나도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사회를 바꾸려면 온몸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탓일까. 당시 그의 말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그리고 학생운동을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과거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으로 밀고 나갔던 나, 그리고 시(詩)라는 방법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온몸으로 나아갔던 김수영 시인, 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매우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 때 접한 그의 작품 중 ‘풀’이라는 시에 유독 애착이 갔다. 이 시는 김수영 시인의 유작(遺作)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 시절, 나에게 있어 ‘풀’과 ‘바람’은 ‘민중’과 ‘불의’의 의미였다. 바람이 아무리 거칠게 불어도 그 힘으로 풀을 뽑지는 못한다. 반면 풀은 때로는 바람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바람보다 먼저 행동하고 결코 꺾이지 않는 능동적이고 강한 삶을 살아내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1987년 6월을 함께한 김수영 시인의 ‘풀’을 2016년 거

울을 지내며 다시금 떠올렸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은 끝없는 바람을 겪어왔다. 하지만 모진 바람의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어김없이 스스로 다시 일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 우리는 바람에 맞서 광장에서 들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다. 이 모두가 풀들이 온몸으로 밀고 나가서 이루어낸 역사가 아닌가!

어찌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 ‘풀’이었다. 강한 삶을 살아내는 풀을 보며 학생운동을 대표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부채감을 늘 갖고 산다. 학생운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롭게 바꾸기를 꿈꾸었고,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진 것이 도의원을 거쳐 지금의 국회의원의 길로 연결된 것이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풀’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풀’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 더 정의롭고 자유롭게 변화시킬지, 어떻게 하면 국민의 권리가 더 잘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낼지, 그 노력을 온몸으로 밀고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본다. 세상의 모든 ‘풀’들과 함께. 🌱

“경제난의 원인 밝혀 위기의 대한민국 살리는 데 주력”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전라북도 정읍이 고향인 유성엽 의원은 농사짓는 부모님 밑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북도청 공무원과 정읍시장을 거쳐 3선 국회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성엽 의원을 국회보가 만났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서 지방자치제도 기본 틀 마련

“제가 집안의 종손이다 보니 할머니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커서 저는 집안 형편이 꽤 넉넉한 줄 알았습니다. 철들어서야 우리 집이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노는 것을 좋아하고 말쑥도 제법 피우는 개구쟁이였다는 유성엽 의원은 중학교 3학년 때 전주 신흥중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 후 전주고를 졸업하고 삼수 끝에 서울대 외교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공부에 집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워낙 시국이 어수선했 때였으니까요. 고민과 갈등으로 방황하며 대학 시절을 보내던 중 경찰공무원을 하는 작은아버지를 뵈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물어보셔서 ‘방송기자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기자라도 할 것 아니냐’며 크게 나무라시더군요.”

이때부터 뭔가 목표를 정해 집중할 거리를 찾던 그는 행정고시를 선택해 공부에 매진했고 1년여 만에 합격했다. 1985년 전북도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유성엽 의원은 1991





년부터 5년여 동안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에 파견돼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행준칙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에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역할까지 했다.

유성엽 의원은 “밤새우며 일하는 날이 많아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바쁜 시절이었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던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지방분권 촉진이 바람직한 국가발전 방향이라고 강조하는 유성엽 의원은 지금도 시민단체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1996년 전북도청으로 돌아온 유성엽 의원은 문화관광국장·경제통상국장 등을 역임한 후 2002년 민선 3기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에 도전해 당선됐다. 그 후 18대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입성에 성공한 그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고 현재는 민주평화당의 중진의원이다.

유성엽 의원은 제20대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6년 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및 불법 모금 강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습니다. 여당의 국감 보이콧과 증인채택 거부 등으로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단독의 국정감사를 매일 새벽까지 진행해 권력형 비리로 문힐 뻔한 국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그 결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언론에서는 저에게 ‘살얼음판에서 빛난 MC유’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지요.”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유성엽 의원이 대표적으로 꼽는 입

법성과다.

“일명 ‘누리과정법’으로 불리는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은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인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6년 말 본회의를 통과해 누리과정 대란을 해결했습니다. 또 ‘서남대 먹튀방지법’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재단의 비리로 대학이 폐교될 경우, 그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해 설립자나 친족들의 ‘먹튀’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위해 힘쓸 것”

최근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지정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해 오랜 세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국가기념일 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와 독립, 민주화를 이끌어온 원동력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널리 알릴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더욱 힘쓸 생각입니다.”

유성엽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 성적표가 너무 나쁘다”며 우려를 표시한 유성엽 의원은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 적절한 처방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개혁이 가능하고 노동유연성도 확보될 수 있으며 나라의 성장잠재력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커지지 않고는 아무리 규제혁파를 외치고 R&D투자를 확대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제난의 원인을 제대로 밝혀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주력하고 싶습니다.”

동물복지, 한일관계, 국민연금 등 주제로 포럼·토론회 열려

‘동물복지를 논하다 : 반려동물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포럼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현승·황주홍·이정미 의원)은 3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동물복지를 논하다 : 반려동물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동물학대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영국에서 허가받은 브리더(사육자) 절반이 10마리 이하를 양육하며,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번식 목적의 사육을 50마리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면 반려동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동물의 실질적인 보호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영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위탁해 유기동물 구조, 입양, 인도적인 처리 등을 하고 있는데, 최저가 입찰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 관리수준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성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사무국장은 “지자체 보호소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유기동물 관리 개선을 말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단순 가격입찰에서 벗어나 보호소의 실질적인 관리능력을 기준으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자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권 제한 등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키우는 것에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3월 11일 원혜영·강창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관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주일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도덕성만큼은 우리가 우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도덕주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한일관계는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정치와 직결돼 있다”며 “경제문제도 연관돼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연관돼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서명한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일관계의 해결 방안으로 양 정상 간 신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공동선언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두 정상 간의 인격적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 오부치 일본 전 총리는 재임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고, 고이즈미 전 총리도 김 대통령에 대해 여러 차례 존경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현재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뿐 아니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판정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한일관계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 교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의 예상보다 일본의 비중이 크다. 북한과 함께 남북일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센터장은 한일관계에 대해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관리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 토론회

정춘숙·남인순·전혜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광수·윤영일 의원(이상 민주평화당)은 3월 12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필요성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신뢰 제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지급보장 명문화를 두고 전문가들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국민, 특히 청년층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 소진 이후에도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홍보해왔으나, 정작 지급보장 명문화 등 실질적 조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명문화해야만 지급을 보장할 수 있다면 사회보험, 즉 본인의 기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는 모두 지급보장을 명기해야 하느냐”며 “현재의 법 규정만으로도 지급은 보장되기에 형식적인 명문화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강 실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문화 규정은 오히려 족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국가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국제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될 텐데 이는 후세대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도 국가의 책임 의무는 기금고갈 시점부터 발생한다”면서 “국가 지급보장 책임의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주력 제조업의 전망과 정책과제’ 강연회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12일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을 초청, ‘2019년 주력 제조업의 전망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한국 경제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단기 과제로 ‘소비 진작’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수출을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소비를 진작해 성장을 이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따라오지 못하고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수출, 정부지출, 소비, 투자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은 만큼 거시경제정책 기본방향은 소비 진작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장지상 원장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한다. 특히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수입품을 많이 쓰면 소비가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 기업들의 제조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산업별 정책으로 노후 차 교체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지원금 확대, 석유



제품 유통시장구조 효율화를 통한 소비 확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교육용 기자재 투자 등을 꼽았다. 장 원장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 진작과 함께 법·제도 정비, 금융, 규제 완화 등 제반 인프라 재정비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제조업 전망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미중 무역 마찰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는 중”이라며 “생산과 수출 증가율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사업은 조선과 반도체, 이차전지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세미나

의원연구단체 ‘임팩트금융포럼’(대표 최운열 의원)은 3월 18일 ‘마켓플레이스금융 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P2P(개인 간 거래) 금융으로도 불리는 마켓플레이스금융(MPL: Market Place Loan)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금 창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본부장은 대안 금융으로서 P2P의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은행과 금융기관이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P2P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MPL금융의 특징, 역할 등을 소개했다. 그는 “MPL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금융으로 주목받았다”면서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MPL금융 대출액이 지난 2017년 기준 260억 달러(약 26조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4억7천만 달러)에 비해 약 60배 늘어난 수준이다.

우리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지만 MPL금융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9월 기준 4조3천억 원으로 지난 2015년(373억 원)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정부의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에 맞춰 MPL금융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해외 MPL 성장의 요인으로 우선허용·점진규제, 다양한 시도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 MPL을 확대하려면) 기존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국내 법체계 특성을 고려해 시장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점진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박민선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예술인 복지법’ 개정



임익상 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년 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폭로 운동인 ‘미투(Me Too)’ 운동이 시작됐고, 2018년 가을, 국회 본회의에서 진선미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문단_내_성폭력”, “영화계_내_성폭력”, “미술계_내_성폭력” 등의 해시태그를 타고 영화계·미술계·공연계 등의 영역에서 문화예술인들의 성폭력 폭로가 이어졌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예술인 성폭력 피해신고·상담기구 마련과 전면 실태조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실시해야 한다는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요구가 계속됐다.

문화·예술계의 미투 운동을 계기로 밝혀진 열악한 제작 및 공연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적인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예술인은 일반 조직 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전시장·문화공간·공연장·촬영장 등에서 계약관계를 통한 프리랜서 혹은 임시직으로 활동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예술계의 특정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된다. 예술계는 ‘큰 덩어리의 공동체’로 여겨지는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어떤 장르·어떤 현장에서든 예술 활동의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는 규정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에 더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형화된 조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는 고립된 채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의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 자격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하는 등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맞추어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화·예술인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셋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고, 해당 실태조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나 임시직 등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많은 만큼, 예술인이 인격 모독이나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웠으나,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은 제도나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예술인 복지법’의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통해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계약의 체결 과정 뿐만 아니라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술인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했다.

다섯째,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포함했다. 일반적인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예술계는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예술인복지재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앞서 지적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지원기관의 공모사업 등에서 성폭력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입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어, 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안전한 활동공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

프랑스 하원의 윤리 준수 향상을 위한 제안

하원 윤리관의 연례보고서

최근 우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년 하원의 윤리 준수 향상을 위해 윤리관의 연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프랑스 하원의 사례를 참조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2011년 4월 6일부터 하원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하원 내에는 하원의원 윤리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규정이 잘 실행되도록 통제를 담당하기 위해 윤리관을 두고 있다. 윤리관은 하원 의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사전에 적어도 야당 교섭단체장 1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장단 구성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임명할 수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윤리관은 의원들의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 민감한 상황들에 대해 의원들에게 조언, 의원의 윤리규정 위반시 하원 의장단에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원 내부규정 제80-3조에 따라 하원의장단에게 하원의원 윤리규정의 준수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및 개인적 사례에 대한 언급 없이 동 규정의 일반적인 적용 현황 내용을 담고 있는 연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원 윤리관은 지난 1월 30일 하원 의장단에게 ‘의원윤리를 위한 새로운 도약(Un nouvel élan pour la déontologie parlementaire)’이라는 제목의 연례보고서를 제출했다.

동 보고서가 제출되기 전, 이해충돌 방지, 가족구성원의 보좌관 채용 금지, 의회 유보 보조금 폐지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 ‘정치활동에의 신뢰를 위한 법’(La loi pour la confiance dans la vie politique)이 2017년 9월 통과되면서, 하원 윤리관의 임무가 확대됐고, 2017년 전체 하원의원의 80%가 적어도 1회 윤리관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을 만큼, 윤리문제에 관한 하원의원들의 질의 및 정보요청이 크게 증가했다.



김정연 프랑스 주재관



2012년 10월에 노엘 느루아르(Mme Noëlle Lenoir) 전 유럽장관¹⁾이 첫 윤리관으로 임명된 이래 세 번째 윤리관인 안네스 로블로-트루아지에(Agnès Roblot-Troizier) 파리1대학 공법교수가 윤리관 직책을 맡은 후 제출된 첫 보고서이기도 한 동 보고서는 1년 동안의 윤리관의 활동 결과 보고 외에도 23개의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윤리관 제안의 주요 내용

연례보고서에서 윤리관이 제안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원 내부규정의 개정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 충돌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해 충돌’이라는 개념은 공직 수행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 사적인 이익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영향을 받게 되는 사례를 회피함으로써 공익을 보호하고, 의원 개인이나 측근이 부당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의원들에 대한 신뢰 유지를 목적으로, 2011년 4월 6일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현행 하원 내부규정 제 80-1조에 따르면, 하원 의장단은 하원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규정하는 윤리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는 특히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것에 관해 이해충돌이란 ‘의원직의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사에 있어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성격의 공적 또는 사적 이익과 공익이 중복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리관은 동 정의가 보다 명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의원의 이해관계에 관한 고유한 신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원들은 임기 초에 공직활동

투명성 고등위원회(국무총리 산하 독립행정기구)에 의무적으로 의정활동 및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동 신고서는 선출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과 직업 활동 및 소득과 연결되지 않아도 본인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고등위원회 사이트에 공개된다. 그런데 동 신고서 제출 이후 의원의 신상에 변화가 있을 시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

반면, 유럽의회는 의원이 투표에 앞서 또는 보고위원의 역할을 맡아야 할 때, 기존에 한 재정소득신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 윤리관은 하원의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 의원의 선택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 신고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일부 직무의 수행금지 가능성을 명백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의원을 일정 직무 수행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프랑스 상원의 경우에는 모든 상원의원이 상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 충돌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직무의 수행에서 배제하거나 제안을 받을 경우 이를 거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자의 초청에 의한 여행 및 기부금 등에 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하원 윤리규정 제7조에서 기부금이나 특혜 및 제3자의 초청에 의한 여행을 윤리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원의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어떤 제재권한도 윤리관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신고의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의원도 많아, 이를 하원 내부규정에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1) 정치활동의 투명성을 위한 고등위원회 신설에 따라 임기 중간에 본인이 사임

방역관리책임자 배치 등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8.5.1.)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 발병이 본격화된 시기는 2000년이다. 2010~2011년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돼지 등 가축의 수만 무려 354만 마리에 이르고 당시 농가 보상금 및 살처분 부지 마련 등에 총 2조8천 6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기도 했다. 2012년, 2013년에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았지만 2014년, 2015년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고 특히 2017년에는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A형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O형 구제역에만 대비해 백신을 준비했던 방역 당국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2017년 9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10월 31일 공포, 2018년 5월 1일 시행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경기도 내 가축 전염병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로부터 가축전염병의 실태와 보완점 등을 알아본다.

호흡기로 감염되는 구제역... 소가 가장 취약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인 구제역은 치사

율 5~55%의 급성 전염병인데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조직 배양 백신을 이용한 예방법이 이용된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사슴·낙타 등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나타난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무리에서 한 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 모두에게 감염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우제류 동물 중에서 돼지가 내뿜는 공기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많아 감염의 위험이 높고 소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하다고 한다.

최권락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AI등 질병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또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해 소 사육 농가에서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10만 마리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하고, 그 세부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해,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최권락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장은 “AI 발생으로 타격을 입은 오리 업계처럼 산업 자체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초동 방역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방역관 충원과 처우 개선 시급

한편 가축전염병 발생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방역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축방역관은 구제역·AI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 농장에 가장 먼저 나가 질병위험도와 증상을 확인해 이동통제·역학조사·살처분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은 1천335명이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권고하는 적정 인원인 1천824명보다 27%가량(489명) 적은 인원이다. 가축방역관의 이직도 늘어나 2017년 그만둔 가축방역관은 74명으로 전년(33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가축방역관의 이직은 대도시보다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서울은 단 한 명도 이직하지 않았지만 충남은 가장 많은 35명이 그만뒀다. 경남·경북이 각각 27명, 전남 24명, 전북이 18명으로 뒤를 이었다.

최권락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장은 “가축방역관의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글. 고영선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18년 9월 14일 여성가족위원회 의결
2018년 12월 7일 본회의 의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탄생했어요.

	여성폭력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
	일관성 있는 통계 구축
	교과과정 내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확산

우리는 이 기본법을 SNS로 홍보하고 여성피해자를 도와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번 기본법을 통해 불미스런 일들이 방지됐으면 좋겠네요.

구독자님도 같이 해요

그렇죠. 다알쥬 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넵. 유튜브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참! 우리 모두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피해자가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국회, 미세먼지 대책 등 논의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행정안전위, '버닝썬' 사건 경찰 부실수사 질타

행정안전위원회는 3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영우 위원(자유한국당)은 “버닝썬 사태에서 일부 경찰이 범죄집단과 밀착해 범죄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폭행까지 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자치경찰제를 하고 나서 지방유지, 토호세력과 경찰이 더 밀착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하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버닝썬 등과 관련한 경찰-업소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고 내용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권은희 위원(바른미래당)도 “버닝썬과 관련한 카톡 메시지 제보자가 경찰 유착 때문에 제보할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국민권익위가 제보자의 의구심이 타당하다고 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 (경찰)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사건도 논란이 됐다. 여당 위원들은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이 봐주기 수사 때문에 무혐의로 결론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영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사건과 관련해 예전에 송치 과정에서) 증거파일을 누락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파일이라 규정상 폐기했다고 한다”며 “누락이냐, 폐기냐”고 물었다. 이에 민 청장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폐기했다)”라고 답변했다.



환경노동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주문

환경노동위원회의 3월 1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장우 위원(자유한국당)은 “이 정부 들어 ‘미세먼지 나쁨’ 지수가 더 심해지고 생활 불편 수준을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매일 화생방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과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외교적 압박을 통해 미세먼지의 해외 요인을 줄이는 것을 왜 등한시하고 게을리하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이야기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저자세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용 위원장은 “온전히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개발한다면 코미디 중의 코미디다.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했다. 그러나 김종석 기상청장은 “실제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 1mm 강우가 오더라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면 기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환경부 주도로는 1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과 관련, “대기질 예보정보·기술교류 협력, 엑스포 개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는 오래전부터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특히 올해 초 한중 국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을 이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일위, 북미정상회담 등 논의

외교통일위원회의 3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둘러싸고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추미애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현안 질의에서 “하노이 회담은 무려 7시간 동안 두 정상 사이 솔직한 대화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핵 문제는 북미가 당사자이지, 한국은 같이 논

의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남북한과 미국이 같이 논의하는 틀이 정형화됐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진석 위원(자유한국당)은 “미국도 북한도 한국을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말하자면 한국 중재자론은 셀프 중재자론”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위원(자유한국당) 역시 “독재자 김정은이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렵게 개발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정부만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한은 영변(핵시설)에 한정해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양측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결과가 됐다”며 “앞으로 협상이 재개된다면 뭐가 쟁점이 될지 훨씬 더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상황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하노이 성과가 없었던 점은 저희도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긴 과정에서 한 대목이라 생각한다”며 “합의 결렬을 교훈 삼아 앞으로 비핵화 대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북) 양측 입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 후 북한과의 대화가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조속히 회담이 재개되길 바라고 (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특사도 보내는 논의를 하느냐”는 박주선 위원(바른미래당)의 질문에 “여러가지 옵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소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쟁점이 됐다. 그는 한때 집 2채와 분양권 1개를 동시에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다주택자 논란을 빚었다.

여당 위원들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실거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고 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최 후보자가 2주택 1분양권 보유자로 25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음에도 솔직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일부 위원들은 “청와대에 인사검증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당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증여는 하나의 (다주택) 정리 방법이라 생각했고, 빠른 시간 안에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떳떳하고자 증여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업무는 주거와 교통,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삶의 질에 필수 기반이 되는 분야”라며 “계층이나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국민도 이들 필수적인 핵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우려가 큰 가운데 최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고 줄여가겠다”라며 “일반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터미널, 임대주택 복지센터 등을 ‘미세먼지 안심 지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외교통일위,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월 26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여당 위원들은 정책 검증 위주의 질의를 이어간 반면, 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후보자를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박왕자씨 피격은 통과의례”, “남한의 NLL(북방한계선) 고수가 철회돼야 한다”, “(천안함 사건의 후속 조치인) 5·24 제재는 지나친 대응”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해당되는 분들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 “부적절한 표현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어떤 조치를 했어야 하느냐”는 박주선 위원(바른미래당)의 질의에 “당시에 제가 정부 당국자라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북한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모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중단 원인이 북과 남 어디에 있느냐”는 정병국 위원

(바른미래당)의 질의에는 “북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의 경우에는 (북측의) 사과와 국민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된다면,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지금의 역사적 기회를 살려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루겠다”면서 “북미 양측이 빠른 시일 내 다시 만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과정이 동력을 잃지 않도록 북미 간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월 26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책 질의 위주의 비교적 차분한 검증이 이뤄졌다.

신동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자가 CJ ENM 이사회 51회 중 48회 참석했는데, 반대표를 던진 적이 없어 영화계 우려가 크다. 스크린 독과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박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계에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있다.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임명된다면 부산국제영화제 스태프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국립오페라단 비정규직 문제 등을 검토해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염동열 위원(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박 후보자가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기준을 가장 적게 위반했다”며 “이중 위장전입을 시인했는데, 흠집 없는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해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위원(바른미래당)은 “문체부 국장 당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야간수업을 들었다고 서면질의답변서에 기재했으나 수강신청 내역을 보니 근무시간과 겹치는 주간수업이 있었다.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문화산업을 육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문화 경제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의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문화에 융합해 새롭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시장을 만들어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한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DMZ 평화관광 등 우리만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교통, 숙박 등 국내 관광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26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일부 위원들은 문 후보자 장남이 적은 분량의 자기소개서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인영어 성적표를 제출했음에도 한국선급에 합격했다며 채용특혜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양수 위원(자유한국당)은 “한국선급은 공인영어 성적표 미제출자와 유효기간 만료자 전원에게 1점을 부여했다”며 “문 후보자 장남의 서류전형 점수는 81점인데, 80점을 받은 4명이 탈락했다. 즉, (유효기간이 만료된 공인영어 성적표로) 1점을 받아 합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장남의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 동기가 면접 위원이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는 이만희 위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과 관련한 위법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자, “솔직히 제가 살뜰히 챙겨보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35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최근까지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현지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국내는 1년에 1~2개월 정도 잠시 들어와 있으면서 지역 가입자로 등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문 후보자는 “해운 재건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 분야의 스마트화를 더욱 가속화해 미래 해운항만산업을 선도하고 세계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 국내 항만 인프라의 차질 없는 확충과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 해외 항만개발을 통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0건 의결

국회는 3월 13일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안 내용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를 재난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렌터카 또는 장

에인,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에 한하여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에 공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 및 휘발유에 비해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시급하고, 과거와 달리 LPG 공급이 원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한 것으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LPG차량을 소유·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에서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해당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다른 어



국회는 3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역사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철역사에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철역사의 공기질 개선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환경부장관이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의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

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제정법률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정법률의 시행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NEWS

2019 APRIL

국회, 올해 들어 첫 임시회 열고 대표연설 및 법안 처리



국회는 3월 7일 올해 들어 첫 국회인 제367회 국회(임시회)를 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회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뒤 “국회 입법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법안심사를 활성화하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들어 66일 만에 열린 국회로 제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새해 첫 국회여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3월 11일부터 3일간 이어진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3월 1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고 벤처·혁신기업을 육성해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한편, 불평등한 갑을구조를 개선하는 등 공정경제를 병행해 ‘포용국가’를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3월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와 대북정책 등 국론 통일을 위한 대통령·원내교섭단체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제안했다.

3월 1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 청와대를 개혁하고,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법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3월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사회재난에 ‘미세먼지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유치원 및 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기 설치 등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미세먼지 8법과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과 각 상임위 활동에서는 하노이 북미회담과 북핵 문제, 경제활성화 방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 자치경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4월 5일까지 계속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며 민생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 한국본부 비전 선포식 참석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 한국본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은 인류의 소중한 가치인 ‘보편적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다”면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하자는 정신을 담고 있기에 정치인들에게 초심을 상기시키고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어 “오늘 한국본부가 15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지도부 출범과 더불어 새 비전을 선포한다”면서 “새로운 비전의 주제는 ‘인류의 화해, 일치의 정치’다. 인류의 화해는 세계 평화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해 아쉽지만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70년 동안 기다렸고 남북한 8천만이 염원하는 ONE 코리아, 일치의 코리아, 함께 꾸는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 한국본부 김성곤 대표(전 국회의사무총장, 제15·17·18·19대 의원), 국회정치포럼 박찬대·이명수 의원(공동대표)을 비롯해 김승희·김영호·김정우·송영길·윤일규·이상민·정진석 의원과 김재윤(제17·18·19대)·길정우(제19대)·안명옥(제17대) 전 의원, 박수현 국회의원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주한 교황청 대사관에서는 알프레드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 마리오 코나모 몬시뇰 참사관, 유흥식 주교 대전교구 교구장 등이 참석했다.

1996년 이탈리아 여야 정치인들이 나폴리에서 시작한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MPPU)'은 한국에서는 15년 전 시작됐으

며, 전 세계 20개국 3천여 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적 운동이다. 아시아지역에선 한국이 유일한 회원국이다.

“여성의 삶의 질 높이고 양성평등 시대 앞당겨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여성 인권향상과 차별 철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에 비해 여성인권의 비약적인 신장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차별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유리천장은 두껍고 직업 선택권에도 여전히 제약이 남아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전한 삶을 살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여성의 날 기념식의 주제는 ‘여성과 경제’다. 경제활동 분야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노골적이거나 묵시적인 차별에 노출돼 있다”면서 “임금격차, 고용불안, 경력단절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절

반의 존재다. 양성평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마련된 오늘 행사가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성평등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저 또한 국회의장으로서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여성과 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자율주행차 시장, 4차 산업혁명 시대 최고의 경연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12일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열린 자율주행기술제품 전시회에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어느 국가도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다. 산업부문은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갈 열쇠다. 이 도도한 흐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

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어 “자동차 기술은 그 나라의 과학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학기술”이라면서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자동차 기술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완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누가 선도하게 될지 가능할 수 있는 최고의 경연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향한 과정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회를 가져올 동력이 될 것이다. 직접적인 자동차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정밀지도, 통신, 스마트도로 등 인프라 산업과 부품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기술혁명은 인간의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시회는 3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개최됐다. 전시회 참석에 앞서 국회 본관 앞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타고 경내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차 시승식이 있었다.

문희상 국회의장, 광주 방문해 지역 리더들 대상으로 특강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19일 광주 남도일보 22주년 창간



행사에 참석해 광주지역 정계·재계·언론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정치 리더십'에 대해 특강을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강연에 앞서 성웅 이순신 장군의 말씀인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인용하면서 "광주는 위대한 민주화의 성지다. 호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을 것, 광주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한 줄도 쓸 수 없었을 것"이라며 광주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강연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역설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먼저 "생아자(生我者)도 부모고 지아자(知我者) 또한 부모다. 바로 그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다"면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대중이라는 이름 석 자가 갖고 있는 국민통합의 상징성과 정통성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승리였다"면서 "수십여 년 동안 소외된 국민들과 함께한 대중정치인이며, 지역·계층·세대 간의 갈등과 반목을 극복했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 한국 정치를 보면 늪에 빠져 있다. 상대방은 적이며, 타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배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해

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치다"라고 말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21세기형 리더십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상주의자 백범 김구 선생과 현실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경영능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적 리더의 자질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라며 "스스로 먼저 깨우치고, 동료와 함께 같이 일어서며, 구성원을 통해 보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100년을 개척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

국회는 3월 22일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가한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를 개최했다.

이번 제25차 회의에서는 3국의 주요 국내정세를 비롯해, 관세 및 무역 이슈 등 경제·통상 현안, 대북정책 비전과 목표 등 안보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통역 없이 영어로 이뤄졌으며, 3국 의원들 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회의내용과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대표단은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을 공동대표단장으로, 이수혁·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일표·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이해훈 의원(바른미래당),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등 여야를 아우르는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미국대표단은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과 제임스 센슨부

레너 의원(공화당)을 공동대표단장으로 하여 주디 추 의원(민주당), 프렌치 힐 의원(공화당), 브렌다 로렌스 의원(민주당) 등 5인이 참석했으며, 일본대표단은 마사하루 나카가와 의원(무소속), 유키히사 후지타(입헌민주당) 등 2인이 함께 했다.

3국 대표단은 22일에 3개 세션에 참가해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공식 환영만찬에도 참석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3국 간 긴밀한 신뢰·협력관계와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자국 안전 보장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 2003년 출범했으며, 연 2회 정례적 회의개최를 통해 3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적 친목체널로 자리매김해 왔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6년, 2008년, 2013년, 2015년, 2017년도에 5차례의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법제실, 강서구 지역현안 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3월 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

구갑)과 공동으로 ‘화곡동 항공기 소음영향 분석과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대학교 등 지역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태섭 의원은 “공항소음에 대한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지정 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 조사과정에서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음대책 인근지역인 화곡동 일부 지역의 경우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오늘 지역현안 토론회를 통해 화곡동 등 김포국제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이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항소음의 적절한 관리와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됐다.

금태섭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입법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독립유공자 후손 매점 판매원에 특별채용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유인태)는 3월 8일 독립유공자 후손 3명을 국회 매점에서 근무할 직원으로 특별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채용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 시험에 응시한 독립유공자 후손 7명 중 3명이 최종 채용됐다. 이번에 채용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국회 본관, 의원회관 및 도서관 매점에서 판매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유인태 국회의사무총장은 “독립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은 일시적인 금전적 보상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 및 생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태 국회의사무총장은 “올해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이 되는 해로, 국회가 앞장서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회의사무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그 후손에 대한 채용 등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비 투명성 강화, 외유성 출장 차단 등 내용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발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안내책자가 발간됐다. 국회는 3월 26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의회외교 활동자문위원회 구성 및 외교활동 타당성 평가, 국

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해 국회의원실에 배포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연구용역 예산집행과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의원외교활동의 타당성에 대한 형식적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부적절한 집행사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서 비롯됐다.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사무처는 ‘의정지원 정보공개 및 예산지원 개선 T/F’를 구성해 의정지원 관련 정보공개 강화방안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 집행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고, 그 결과로서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다.

유인태 국회의사무총장은 책 발간에 부쳐, “계획적 예산·공익적 집행·투명한 공개를 국회예산 3원칙으로 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개혁을 목표로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홍 국회의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국회의사무처가 의정활동지원에 있어 다소 소극적으로 임해 온 사실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정보공개 사항 등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포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및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특히 의원실에서 수행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경우, 종전에는 단순히 보고서만 제출하면 경비가 지출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보고서를 국회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경비유용·표절 시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의원외교활동의 외유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모든 외교활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모든 일정 및 소요예산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방문 결과보고서를 적시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분기별로는 사후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추후에 진행될 외교활

동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셋째, 보조금을 받는 국회서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12개의 국회서관 법인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총 97억 원이다. 그동안에는 특별한 감독 없이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의 중복과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뤄져 왔으나,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엄격해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집행 단계에서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개선 내용 등을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발간, 의원실 지원예산의 절차·요건 및 제도변경 사항 등을 국회의원실에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국회 홈페이지에도 안내서 원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회도서관, 국내 최대 전자도서관 협의회 '한국학술정보 협의회' 분과위원회 발족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이 설립을 주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정보 중심 전자도서관 협의회 '한국학술정보협의회'가 3월 13일 국회에서 주제별 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도서관계의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2년 국회도서관 주도로 설립된 도서관·정보기관 협의체로서, 국회도서관과 국회전자도서관 원문 DB 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공공·전문·대학도서관 등 국내외 1천 89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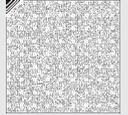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도서관계의 미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학술정보 공동 활용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분과위원회', '국가학술정보신경망 조성 분과위원회', '저작권법 개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도서관 활용 방안과 디지털 시대 저작권법 관련 이슈 공동 대응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후 제8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취임



제8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취임식이 모든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3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이종후 신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도시행정 석사학위를, 미국 오리곤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제9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임용된 후 약 30년간 국회에서 근무하면서 재무위원회·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의사과장 및 의사국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전문위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공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종후 신임 처장은 취임식에서 “앞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위상을 높이는 데 모든 노력과 열정을 다하고,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재정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자”고 포부를 밝혔다.

김하중 제7대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 임명동의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김하중 변호사를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날 임명동의 의결 직후,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대한민국의 입법과 정책의 구심점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입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9년까지 서울

지방검찰청 검사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북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중앙일보와 ‘2050년의 경고’ 연재 기사 공동기획

국회미래연구원(원장 박진)은 2018년도 미래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일보와 ‘2050년에서 보내온 경고’ 연재 기사를 공동으로 기획했다. 지난 3월 5일 보도를 시작한 공동기획 기사는 공동기획 취지, 원장 인터뷰 및 13개 분야에 대한 미래 시나리오가 순차적으로 보도 중이다.

미래연구원은 한 세대를 바라보는 2050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13개 분야별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기후/환경, 에너지, 정주여건, 생명공학, 우주기술, 정보기술, 식량/수자원, 경제, 사람(Human), 인구/사회, 정치/행정, 국제정치, 북한 등 13개 분야는 지난 10년간의 학술자료와 1년간의 소셜미디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추려낸 중심어를 바탕으로 구분한 것이다. 13개 분야별 복수의 미래 시나리오는 현재 상황이 지속할 경우 발생가능성이 큰 미래, 바람직한 미래, 회피해야 할 미래,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 등으로 구성했다.

미래연구원은 발생가능한 복수의 시나리오 중에서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중앙일보는 미래연구원의 궁극적인 역할에 대해 “사회에 대한 자명증 및 나침반과 방향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3월 7일 기사에서 인용 보도했다.

태평양회의의 참석을 추진한 제3대 의장 홍진



홍진

파리강화회의에 이어 큰 기대를 걸었던 국제회의가 있었다. 태평양회의였다. 태평양회의는 미국의 주도하에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이 참가해 해군군비 축소문제와 태평양 및 극동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회의에서 한국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회의 참석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한 인물이 제3대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이었다.

대한제국 법관양성소 출신인 홍진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3·1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국내에서 이규갑과 함께 13도대표자대회와 국민대회의 형식을 거쳐 한성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품에 안고 상해로 망명했다. 1919년 9월 상해·연해주·국내에서 수립된 세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룰 때, 그 정통성을 인정받고 통합의 중심이 됐던 것이 한성정부였다.

홍진은 임시정부가 무정부상태에 빠졌을 때, 의장에 선출됐다. 1921년 초반 임시정부는 무정부상태나 다름없었다. 1920년 12월 대통령 이승만이 상해에 부임했지만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해 국무원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는 사퇴했고, 대통령도 5월 하와이로 돌아갔다. 이어 김규식·노백린·남형우·안창호 등 국무원들도 연이어 사퇴했다.

무정부상태를 수습한 것은 임시의정원이었다. 제8회 회의에서 법무총장 신규식으로 하여금 국무총리를 대리하도록 했고, 손정도(교통)·이희경(외무)·김인전(학무) 등이 국무원에 임명됐다. 의장 손정도가 교통총장에 임명되면서, 의장을 다시 선출했다. 1921년 5월 6일 홍진이 제3대 의장에 선출됐다. 신규식과 홍진이 책임자가 되어 혼란에 휘말린 정부와 의정원을 수습하고 이끌어야 했다.

이때 국제정세에 두 가지 변수가 일어났다. 한국독립운동에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손문(孫文)이 광둥에서 호법정부 대총통이 됐고, 미국에서 태평양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신규식과 홍진은 이를 활용해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다. 역할을 나눠 맡았다. 신규식은 호법 정부에 대한 교섭을 하기로 하고, 홍진은 태평양회의에 대한 일을 맡기로 한 것이다.

신규식은 호법정부와 교섭을 위해 광주로 떠났다. 자격은 임시정부 전권특사였고, 1921년 10월 호법정부 대총통 손문을 방문했다. 신규식은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과 독립운동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손문은 한국과 중국은 영국과 미국의 관계와 같다고 하면서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신규식이 요청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태평양회의에 공동으로 대처하자고 했다. 중국에서 파견하는 대표에게 임시정부 대표와 호응하며 협력하도록 훈령을 내려달라고 한 것이다.

홍진은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이는 태평양회의에 대한 외교활동을 위해 1921년 8월 조직한 기구였고, 홍진이 책임자인 간사장을 맡았다. 목표는 ‘태평양회의에서 한국독립을 승인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전 국민에게 선전하여 일치한 행동을 하게 할 것,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것, 대표를 선정하여 파견할 것, 독립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보낼 것 등을 결정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선전활동을 위해 ‘선전’이란 잡지를 발행했다. 홍진은 이를 통해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었던 파리강화회의에서도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극동문제를 토의·해결하고자 하는 태평양회의야말로 천재일시(千載一時)의 기회”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안창호 등의 인사들을 초청해 연설회를 개최하고, 국내외에 있는 전국민들이 이

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임시의회를 개최해 태평양회의에 파견할 대표에 대해 동의했다. 임시의정원법에 주의 대사나 대표를 파견할 경우, 정부는 의정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었다. 정부는 이승만을 대표, 서재필을 부대표로 선정하고 의정원에 동의를 요청해왔다. 홍진은 1921년 9월 25일부터 제9회 임시의회를 개최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대표인선요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태평양회의에 파견할 대표와 부대표가 결정됐다.

홍진은 의정원 의장 명의로 미국에 있는 이승만과 서재필에게 태평양회의 출석대표로 선정됐음을 통보했다. 의정원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승만을 대표장, 서재필을 부대표장, 정한경을 서기, 프레드릭 돌프(Frederic A. Dolph)를 고문’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했다는 사실, 그리고 태평양회의에서의 활동을 비롯해 참석한 국가들과의 교섭이나 조약 체결 등 전권을 대표단에게 위임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의정원 의원 명의로 세계 각국 의회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표단 선정에 동의한 후, 의원 25명 명의로 ‘태평양회의에 대한 한국독립청원서’를 작성,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이는 “세계평화를 도모하려면 극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극동문제 해결은 한국의 완전한 독립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이 실현되지 않으면 세계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각국 의회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한국독립에 대한 여론조성과 태평양회의에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다.

태평양회의에 제출할 ‘독립청원서’를 작성하고, 국



국내의 단체 및 지역대표 372명의 명의로 태평양회의에 제출한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

내 지도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단에게 보냈다. 독립청원서는 국민들 명의로 제출하기로 하고, 국내 인사들의 서명을 받았다. 국내 인사들의 서명을 받는 일은 극비리에 이뤄져 그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1921년 12월 태평양회의외교후원회 간사였던 여운홍이 국내에 들어와 반도고학회 총재 장세담(장형)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순회강연을 한 것이 있다. 강연회를 빌미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지역 대표들에게 서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청원서의 명칭은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라고 했다. 한국의 국민들이 태평양회의에 독립을 청원한다는 말이었다. 모두 372명의 인사가 소속과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이들 중 단체대표는 101명이고, 지역대표는 271명이다. 지역대표는 도별로 구분해 군(郡)대표 이름으로 돼 있다.

홍진은 국민들의 이름으로 된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를 이승만과 서재필에게 보냈다. 이들은 이를 영어로 번역해 태평양회의 사무국과 참가국 대표들에게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도 공개했다. 그리고 태평양회의 의장인 미국무장관 찰스 에반스 휴즈를 방문해 참석을 요청했지만, 열강들은 일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다. 결국 태평양회의는 한국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종결됐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좌절감이 적지 않았다. 커다란 파장이 일어났다. 국무총리 신규식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태평양회의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홍진은 이를 주도했던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홍진도 사퇴서를 제출했고, 정기의회 중인 1922년 4월 3일 회의에서 사면청원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홍진은 임시정부의 수반인 국무령으로, 또 두 차례에 걸쳐 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글·사진. 한시준 교수(단국대 사학과 동양학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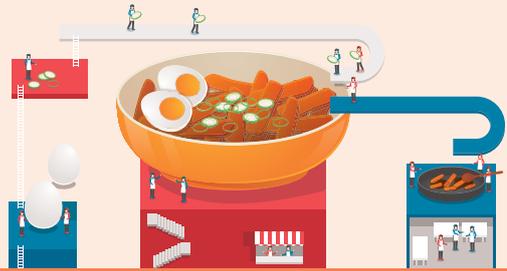


국회 사랑재에 찾아온 봄

국회 사랑재 옆 산수유가 샛노란 꽃망울을 터트렸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노란 꽃, 산수유입니다. '봄의 전령사' 산수유가 피어난 4월, 국회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국회도 긴 겨울을 뒤로 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글. 박민선 사진. 김진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과 판매 수수료



휴게소에서 파는 4천 원짜리 떡볶이의 원가를 분석해보면 대략 2천 원이 휴게소 운영업체 수수료이고 떡볶이 재료비가 1천 원 남짓, 떡볶이를 만들어 파는 상인의 마진이 약 1천 원 정도다. 휴게소 맛집이 소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휴게소 음식 맛에 대해서는 평가가 박한 편이다. 4천 원짜리 떡볶이에 재료비는 1천 원밖에 못 들어가니 그 떡볶이가 맛이 있을 턱이 있겠느냐면서 휴게소 운영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가 떡볶이를 맛없게 만드는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언론 보도도 종종 보게 된다.

그렇다면 그 판매 수수료가 더 낮아지면 휴게소 떡볶이가 더 싸지거나 더 맛있어질까. 물론 수수료를 1천 원으로 낮추면 4천 원짜리 떡볶이의 재료비로 2천 원을 쓸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전보다 더 맛있어질 게 확실하다. 그러나 이곳은 고속도로 휴게소다. 동네 떡볶이집은 맛있으면 손님들이 더 자주 가서 사먹고 맛없으면 그집에 다시는 안가지만 휴게소는 맛있다고 손님들이 더 자주 오지는 않는다.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받아가는 수수료를 낮춰봐야 떡볶이 재료비는 올라가지 않고 그냥 떡볶이집 사장님 이익만 늘어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커피숍이 있는데 그 곳에서는 포인트 적립이나 이동통신사 할인 또는 신용카드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경쟁이 없는 환경이라 그

렇다. A라는 빵집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을 해주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고객들이 B빵집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빵집이 A 하나 뿐이다.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을 해줄 이유가 없다.

손님은 많은데 할인도 없으니 빵집의 이익이 많이 생기는 걸 아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체는 수수료율을 최대한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빵집 사장님이 그 이익을 다 가져가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가 높은 수수료율을 받는 걸 아는 도로공사는 휴게소 월세를 많이 받는다. 깎아준다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수수료율과 월세는 그렇게 계속 올라간다.

수수료율을 낮춘들 음식의 품질이 달라지지 않는 이런 특수한 환경에서는 판매 수수료율을 낮추는 게 의미도 없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여론의 압박이든 뭐든 판매 수수료율을 억지로 낮췄다고 치자. 그러나 떡볶이집 사장님이 그런 만족스러운 이익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다.

사실 떡볶이집 사장님이 50% 이상의 높은 수수료율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사를 하는 이유는 휴게소 장사가 동네에서 분식점을 차리고 떡볶이를 파는 것보다 수입이 좋기 때문이다. (휴게소는 가게 인테리어도 전기요금도 각종 집기도 모두 제공한다.)

그런데 마진이 한 그릇에 1천 원에서 2천 원으로



올라가면(수수료율이 50%에서 25%로 낮아지면) 그 사실은 금방 알려지고 그 휴게소 반경 30킬로미터 안에서 떡볶이 가게를 하는 사장님들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는 다들 이 휴게소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겠다며 줄을 설 것이다. 결국 수수료율을 많이 내겠다는 사장님에게 그 자리를 내주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결론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떡볶이 가게의 판매 수수료율은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떡볶이가 부실한 건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과 정성을 쏟으려면 휴게소 대신 그런 정성과 노력의 대가가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학교앞이나 아파트 상가에 떡볶이집을 차리는 게 맞다.

휴게소 음식의 질, 수수료율과 상관없어

휴게소 운영업체 수수료율을 50%에서 25%로 낮추도록 만드는 것도 말이 쉽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잠깐 휴게소 운영구조를 잠깐 들여다보자. 떡볶이 상인에게 수수료를 받아가는 휴게소 운영업체는 사실 휴게소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도 도로공사에 연간 임대료를 내고 휴게소 공간을 빌려서 쓰는 세입자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떡볶이의 재료비보다 임대 수수료가 그렇게 비싼 이유는 그 수수료를 받아가는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1. 도로공사에 내는 월세, 2. 전기요금 등 운영비, 3. 주방이나 식탁 등 휴게소 인프라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임대수수료는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정도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렇게 받고 있다면 휴게소 운영업체는 때돈을 벌고 있을 것이고 그 소문이 나면 다음번 휴게소 운영업체 입찰에서

더 많은 월세를 내고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당연히 생길 것이다. 너도나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하겠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는 것은 그 정도 수수료가 그리 큰돈을 벌 만한 과도한 수수료율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맛이 없는 편이다. 이유를 굳이 찾자면 소비자들의 행동 때문이다. 맛없게 만들어도 그 누구도 별을 내리지 않으니 맛있게 만드는 상인이 바보가 되는 환경이 고속도로 휴게소다.

과도하게 높아보이는 판매 수수료율은 오히려 아 이러니하게도 휴게소 음식의 품질을 그나마 유지시키는 힘이 된다. 휴게소 음식은 내버려두면 계속 맛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도로공사는 휴게소 이용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음식 만족도를 평가하게 한다. 점수가 낮으면 다음번에는 그 휴게소 운영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꾼다.

일견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만 문제는 그렇게 다른 업체로 바뀌는 게 무서워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도록 했는데도 떡볶이를 계속 맛없게 만든다면 그 자리를 어묵가게로 바꿀 거라고 부지런히 압박하려면 휴게소 운영업체가 남기는 마진이 많아야 한다. 1년 내내 장사해도 겨우 운영비를 건질까 말까인 그런 휴게소라면 소비자 만족도 점수가 낮아서 다음번에 그 장사를 못하게 된들 뭐가 겁나겠는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가 중간에서 받아가는 높은 수수료율은 부당한 갑질의 결과가 아니라 허허벌판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나마 더운 음식을 먹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다. 개선할 여지가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하는 지혜는 의외로 유용하다. 

글. 이진우(MBC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일하는 국회’의 8할은 소위원회



김하니 기자
머니투데이

우여곡절 끝에 3월 임시국회가 가동됐다. 여야 협치의 운기가 아닌, 여의도를 습격한 미세먼지 덕분(?)이라는 자조섞인 농담이 정론관에 일렁였다.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가 올해 첫 기지개를 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발의 법안과 검토보고서들이 먼지를 털어내고 상임위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속속 자리를 찾아 첫 장을 넘겼다. 주요 현안 중심으로 만들어진 7개의 특별 위원회도 곧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와 교섭단체연설, 대정부질문에 인

사청문회까지. 국회 출입기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손가락은 더 빨라졌다. 기자가 속한 머니투데이 ‘더 300(the300)’은 기자 1명당 1개의 상임위를 전담하고 있다. 한번에 100건 넘게 상정되는 법안을 훑고 검토보고서와 법안소위 결과를 매번 체크해야 한다.

국회 담당으로 두 해째를 맞으며 가장 크게 확신하게 된 점이 있다면 ‘일하는 국회’의 8할은 소위원회라는 부분이다. 발의 법안의 취지, 예상 효과, 개정의 문제점, 피해 집단과 수혜집단, 유사 법안간의 병합심사 등 정치의



다이내믹스라 할 수 있는 여야간 토론과 협상의 장면을 생생히 목격할 수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는 작은 ‘전쟁터’를 보는 듯하다. 단순히 여당과 정부, 야당의 전선(戰線)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정책 목적, 산업 육성, 지역 발전 등에 따라 사안별로 동맹과 대치 구도가 변화무쌍해진다. 정부의 잘못된 예산 집행이나 편성을 더 큰 목소리로 꾸짖는 여당 의원들의 ‘회초리’도,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지만 취지에 공감하며 격려하는 야당 의원의 ‘품격’도 기자들에게는 풍부한 취재거리이자 정치경험의 자산이 된다.

기존의 보도가 ‘분량’의 한계로 슬쩍 책임을 회피하며 본회의장에서의 한 마디, 전체회의에서의 호통 등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소위야말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철학과 논리를 어깨너머 확인하고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 그리하여 소위에서 새로운 의원들의 모습과 노력을 취재기사로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위 취재는 번번이 무산되기 마련이다. ‘불편함’ 때문이다. 소위에 언론인이 앉아있으면 여야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불편하다는 이유, 자리가 비좁아 보좌진이 앉을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 어떤 기자는 들어오고 어떤 기자는 (나중에 자리가 모자라) 못 들어올 경우 항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 어떤 상임위는 비공개가 관례라는 이유, 다양한 이유로 여러 상임위 소위에서 ‘퇴장’을 종종 요구받곤 한다.

법안소위 언론에 공개한 ‘통 큰 결단’

사실, 소위 회의록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다만 일주일에서 열흘정도의 ‘시간차’가 있다. 열흘 전 소식은 ‘뉴스’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회의장 문 앞에서 대기하는 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서서 들락날락하는 의원이나 보좌진에게 한 마디씩 건네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소위에서 수십번 ‘딱지’를 맞고 입구에서 대기하던 지난주 어느날, “법안소위도 언론인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의원들의 토론 내용을 취재할 수 있게 해주자”는 통 큰 결단을 만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법안소위에서다.

기자는 그날도 소위 시작 5분만에 퇴장요구를 받고 밖에 대기하고 있었다. 2시간여 회의 후 중간 휴식시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취재가 어렵다”는 기자의 말을 듣고 회의는 취재할 수 있게 하자며 동료의원들을 설득했다. 홍의락 소위원장과 권칠승 민주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종배 한국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날 회의장에 있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께도 안건으로 올려 언론의 소위 취재를 더 가능하도록 노력하는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며 적극적인 의사도 표명했다.

국회사무처도 상임위 취재지원 확대

비슷한 시기, 국회사무처에서도 상임위 취재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홍보기능 강화’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중요 이슈가 있는 소위의 경우 회의 내용을 당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사실, 소위와 소소위 비공개는 정치의 가장 큰 매력인 ‘협상’을 ‘밀실합의’라는 오명으로 뒤바꿔놓기도 했다. 며칠 지난 회의록 보도는 종종 ‘뒷북’ 보도의 누명을 쓰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제20대국회의 변화는 반갑고 또 기록해둘만 하다고 생각한다.

‘비공개의 관례’가 상쾌한 파열음을 내며 조금씩 변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를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해 국민들께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싶다. ‘하늬바람’이라는 제 이름처럼, 국회도 바람의 체력을 가졌길 바라본다. 🌬️

내 마음대로 모양 바꾸는 디스플레이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 (CES) 2019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됐던 것은 LG전자의 롤러블 TV였다. 볼 때는 화면을 펼쳤다가 보지 않을 때는 동글게 말아서 본체 안에 넣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 얼마 뒤인 2월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2019에서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갤럭시 폴드를 발표했다. 중국의 화웨어도 폴더블 스마트폰 메이트X를 발표했다. 올해 들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전자 제품을 보면 미래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든다.

롤러블 TV나 폴더블 스마트폰을 가능하게 해준 건 접거나 말 수 있는 디스플레이, 즉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다. 화면이 휘어 있는 커브드 TV나 커브드 모니터, 화면 가장자리가 동글게 구부러져 있는 스마트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중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출시 상태부터 구부러져 있을 뿐 사용자가 마음대로 구부릴 수는 없었다. 사용성에서도 특별히 나올 게 없어서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과거와 달리 유연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게 된 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덕분이다. OLED는 전류에 반응해 빛을 내는 유기화합물로 만든다. 뒤에서 빛을 쏘아주어야 하는 백라이트가 필요한 액정디스플레이(LCD)와 달리 뒤에서 자체발광하기 때문에 더 가볍고 얇게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화면을 구부릴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

이미 주요 스마트폰에는 OLED가 쓰이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딱딱한 화면을 쓰고 있다. 그건 OLED를 지지하는 하부 기판과 소자를 보호하는 ‘봉지’의 재료가 유리이기 때문이다. 유리는 안정성이 뛰어나 OLED를 보호하는 역할을 잘해내지만, 유연성은 떨어진다. 오래전부터 쓰인 고마운 소재지만, 플렉서블이라는 새로운 목표에는 방해물이 되는 셈이다.

유리를 대신해 하부 기판에 쓰인 소재는 폴리이미드다. 폴리이미드는 플라스틱으로, 유연하면서도 열에 강해 그 위에 유기물을 쌓을 수 있다. 유리 봉지를 대신해서는 얇은 필름인 박막봉지(TFE)를 이용한다. 유기물층 위에 무기막과 유기막을 번갈아



쌓아서 외부의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기술이다. 이렇게 하부 기판과 봉지에 쓰이던 유리를 유연한 소재로 대체하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

커브드 TV처럼 휘어진 채로 고정된 제품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다. 이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1세대라고 하면, 최근 등장한 접거나 둥글게 말 수 있는 제품을 2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1세대와 달리 사용자의 경험을 크게 바꾸어줄 전망이다. 폴더블과 롤러블 디스플레이만 완전히 상용화가 되어도 활용도가 매우 넓어진다. 넓은 화면으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고, 시각이나 날씨 같은 소소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조금만 펴서 슬쩍 볼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크기나 가로세로비가 달라질 수 있어 콘텐츠 제작자로서도 고민이 많아질 것이다.

그다음 목표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이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어느 한 방향으로 접히거나 말리는 게 아니라 고무처럼 어느 방향으로든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하다. 궁극적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 할 수 있다.

옷에서 동영상이 보인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된다면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일단 누구나 항상 큰 화면을 들고 다닐 수 있다. 큰 화면도 접어서 조그맣게 만들 수 있으니 지금 같은 스마트폰 화면의 크기 경쟁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굳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피부에 붙이면 되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기 전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디스플레이를 아무리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도 스마트 기기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CPU나 메모리, 카메라, 배터리 같은 부품은 단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품을 휘지 못하면 디스플레이를 휘는 의미가 없다. 최근에 나온 폴더블 폰이 반으로만 접히는 것도 이 문제 때문이다.

플렉서블 회로와 배터리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이므로 언젠가 우리는 완전히 휘어지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단단한 부분을 최소화한 뒤 별도의 공간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유연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기에 따라 활용도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용도는 웨어러블 장치와의 융합이다. 예를 들어, 심박수, 혈압 같은 몸 상태를 나타내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쓸 수 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로 스마트워치를 만들어 손목에 찬다고 생각해보자. 거추장스럽던 기존 제품과 달리 자신의 손목 굴곡에 꼭 들어맞는다. 심지어 시곗줄 부분까지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로 스마트워치를 만든다면 아마 손목에 편안하게 감기는 띠 형태가 될 것이다.

옷에는 어떻게 응용이 될까? 현재의 단단한 디스플레이를 옷에 부착한다면 아주 불편하고 우스운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아직은 소형 LED를 부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스마트 섬유로 구현할 수 있다면 착용감이 보통 옷과 다름없게 만들 수 있다. 입고 있는 옷 전체가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옷은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특수 직업군에서 입는 작업복에 쓰일 수 있다. 색깔이나 문양으로 주변 사람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는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 디자인을 바꿀 수 있다. 단순히 색깔이나 문양이 바뀌는 것을 넘어 영화에서나 보듯이 옷 위에 영상을 재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미래의 길거리는 누구나 하나씩 걸치고 다니는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는 온갖 무늬와 영상으로 화려한 곳이 될 것이다. 🍷

글. 고희관(과학칼럼니스트)

어스름 달빛 아래 두 남녀의 밀회, 신윤복의 ‘월하정인(月下情人)’



‘월하정인’(국보 135호, 18세기 말~19세기 초, 종이에 채색, 28.2X35.6cm, 간송미술관 소장)

어스름 달빛이 드리운 한양의 뒷골목, 젊은 남녀가 밀회를 즐기고 있다. 여성을 보니 무릎까지 내려오는 쓰개 치마를 뒤집어쓰고 삼회장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었다. 삼회장저고리는 소매 끝동, 깃, 고름을 자주색으로 꾸민 조선시대 최고급 저고리를 말한다. 옷매무새로 보아 여인의 멋스러움이 여간 아니다. 뺨엔 얼굴에 붉은색

입술이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치마를 들어 허리춤에 둘러매느라 하얀 속바지가 살짝 드러났다. 신발이 자주색인데, 고급 가죽신이나 비단신인 것 같다. 여인의 속바지와 신발코의 곡선이 화면을 농염하게 한다.

초롱을 들고 나선 총각은 수염도 나지 않은 앳된 양반이다. 과거 시험공부 팽개치고 아버지 몰래 집 밖으로



나와 기생을 만나고 있다. 얼굴은 약간 상기됐다. 여인을 바라보고 있지만 발끝은 반대편을 향하고 있다. 여인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굴뚝같다. 한적한 물레방앗간 같은 곳이 아닐까. 총각의 속은 타들어가는 데 아, 여인의 두 발끝 역시 한량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다. 남녀의 얼굴엔 부끄러운 듯 애뜻한 정이 넘쳐흐른다. 손톱 같은 초승달(?)에 살짝 허물어진 담장 모퉁이, 두 남녀가 남의 눈을 피하기에 제격이다. 분위기는 그래서 더 아련하고 애뜻하다.

혜원 신윤복(蕙園 申潤福, 1758~1813 이후)은 여기에 한 편의 시를 써넣었다. “月沈沈夜三更 兩人心事兩人知(월침침야삼경 양인심사양인지).” ‘달은 깊어 삼경인데 두 사람의 속마음이야 두 사람만 알리라’는 뜻이다. 그림의 분위기와 이 시구가 절묘하게 어울린다. 삼경이면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조선시대엔 당연히 통금 시간인데 이를 어기고 두 남녀가 만나고 있다니, 놀라운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관능적이지만 은근하고 절제 있는 신윤복 작품

신윤복의 대표작 ‘월하정인(月下情人)’은 이렇게 보는 이를 사로잡는다. 남녀의 사랑을 표현한 조선시대 그림 가운데 이보다 더 매력적인 작품이 또 어디 있을까.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관능적이지만 어수선하거나 과하지 않고 은근하면서 절제가 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보는 이의 시선을 붙잡는다.

신윤복은 약간 높은 곳에서 두 남녀의 만남을 내려다 보듯 그림을 그렸다. 그 부감(俯瞰)의 시선 덕분에 감상자는 밀회의 현장을 훑쳐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림 속 담장을 일자(一字)가 아니라 모퉁이로 처리한 것도 밀회와 훑쳐보기의 분위기를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로 인해 이 그림은 더욱 은밀해졌다.

색감의 매력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옥색으로 코와 뒤축을 댄 남자의 가죽신, 도포의 녹색 끈, 여성의 자주색 신발과 옥색 치마, 삼회장저고리의 자주색 소매 끝동... 이런 색깔들이 은은한 화면에 긴장감과 함께 생동감을 부여한다. 은근하면서도 세련된 색감이 이 그림의 관능에 품격을 더해준다. 지나치지 않게 절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혜원 신윤복은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년 경)와 함께 흔히 조선시대 풍속화의 쌍벽으로 일컫는다. 하지만 신윤복은 김홍도와는 사뭇 다른 풍속화를 그렸다. 김홍도가 평범한 백성의 노동하는 일상을 그렸다면 신윤복은 양반과 기생의 예로틱한 유희 문화를 주로 그렸다. 조선시대의 분위기에선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이 그림은 신윤복 풍속화의 대표작인 국보 135호 ‘신윤복 풍속도 화첩’(18세기 말~19세기 초, 간송미술관 소장)에 들어 있다. 이 화첩엔 ‘월하정인’뿐만 아니라 ‘월야밀회(月夜密會)’, ‘단오풍정(端午風情)’, ‘연소담청(年少踏靑)’ 등 모두 30점의 그림이 수록돼 있다. 일제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澗松 全鏐弼)이 일본에서 수집한 것으로



‘단오풍정’
(국보 135호, 18세기 말~19세기 초, 종이에 채색, 28.2X35.6cm, 간송미술관 소장)



‘연소담청’
(국보 135호, 18세기 말~19세기 초, 종이에 채색, 28.2X35.6cm, 간송미술관 소장)

로, ‘혜원전신첩(蕙園傳神帖)’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화첩 속 그림들은 18세기 말~19세기 초 조선 양반들의 유희와 연애를 꾸밈없이, 그러면서도 낭만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시대 최초의 입맞춤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월야밀회’, 여성들의 그네 타기와 물맞이를 묘사한 ‘단오풍정’, 젊은 한량들과 기생들의 봄나들이를 그린 ‘연소담청’, 젊은 한량이 여성을 유혹하는 모습을 그린 ‘소년전홍(少年剪紅)’과 ‘춘색만원(春色滿園)’, 기녀들의 칼춤을 역동적으로 묘사한 ‘쌍검대무(雙劍對舞)’, 젊은 한량들의 술버릇을 그린 ‘주사거배(酒肆擧盃)’와 ‘홍루대주(紅樓待酒)’ 등.

신윤복이 보여준 양반과 기생의 유희는 때론 놀라 우리만치 적나라하다. 신윤복은 이렇게 당시 사람들의 감춰진 욕망과 에로티시즘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냈다. “아니 유교사회 조선에서 이런 문화가 있었다니”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대담한 과거이다.

신윤복의 풍속화는 깔끔하고 세련됐다. 관능적인 분

위기와 선명한 색감이 특히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전통 화가 가운데 신윤복의 색감은 단연 독보적이다. ‘단오풍정’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색깔이 은근하다. 그런데 그네 타는 여인의 옷이 노랑 저고리에 붉은 치마로 돼 있다. 노란색과 붉은색이 눈에 확 들어온다. 은은한 톤에 포인트를 준 것이다. ‘연소담청’을 보면 말에 올라탄 기생들의 푸른색 치마가 화면에 생동감을 가져다준다. ‘춘색만원’에서는 채소 소쿠리를 안고 있는 여성의 진노랑 저고리가 보는 이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쌍검대무’의 경우, 붉은 치마와 청색 치마를 입은 여인들을 화면 중앙에 배치했다. 붉은색과 청색의 대비를 통해 화면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신윤복의 사람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옷을 멋지게 차려입었다. 착용한 장신구와 노리개도 다양하고 화려하다. 신윤복의 풍속화엔 조선시대 패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저고리를 보면 길이가 짧고 품이 좁다. 치마는 배추포기처럼 부풀어 올라 있다. 저고리는 작고 딱 끼는 반면, 치마는 풍성하다고 해서 이를 하후상박형(下厚上薄形) 치마저고리라고 부른다. ‘연소담청’에 나오는 기생들의 패션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길이는 짧고 가슴과 허리춤이 몸에 꼭 달라붙은 데다 저고리 옷소매도 짧고 팔에 꼭 길 정도다. 흥미롭게도 이것이 19세기 여성 패션의 대세였다.

신윤복의 풍속화 가운데 ‘월하정인’은 특히 더 그윽하다. 그래서 더욱 돋보인다. 그림을 다시 보자. 통금 시간 길을 나선 이 여성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양반집 규수일까, 기생일까. 정황상 기생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양반댁이면 어떡고 기생이면 어떡랴. 이미 연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글·사진. 이광표 교수(서원대 문화유산학)

국회, 100년을 **있다** 내일을 **열다**



2019 국회개방행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국회 100년 **의 봄**

2019. 4. 6 ▶ 4. 7 2일간 국회 잔디마당 등 국회경내

- 축하공연 '임시의정원의 봄을 있다' | 출연진 : 풀킴, 울랄라세션 4월 6일(토)
- 최태성과 함께 하는 특별 토크쇼 '임시의정원 100년, 내일을 열다' 4월 7일(일)
- 특별체험전 1919 임시의정원을 만나다

국민참여

- 도전! 임시의정원 골든벨
-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
- 국회 희망메세지 아트월
- 3.1 독립선언서 릴레이 필사
- 태극기 컬러링

국민체험

- 임시의정원 멤버 되어보기 포토존
- 임시의정원 스탬프 투어
- 독립운동 VR 체험
- 1919년 의복 체험
- 독립선언문 캘리그래피

국민나눔

- 임시의정원 '백주년 떡' 나눔
- 백년해로 주전부리



청주 무심천 꽃길과 용화사 삼불전

4월은 꽃물결이다. 꽃물결 따라 사람들도 밀리고 쏠린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과 신록을 앞세운 봄의 생기가 산천을 물들인다. 꽃물결 따라 걷는 충북 청주시 무심천길, 그곳에 서린 옛이야기가 산천을 물들인다. 4월 무심천 꽃길이 상서롭다.

무심천





무심천에서 완성되는 봄의 삼원색

해마다 4월이면 청주 무심천은 그야말로 ‘꽃대궐’이다. 청주 시내를 관통하며 남북으로 흐르는 무심천, 그 물길 중 서원구 분평동 수영교부터 청원구 내덕동 제2운천교까지 약 5.2km에 걸쳐 꽃길이 이어진다. 그중에서도 청남교부터 제1운천교까지 약 2.5km 구간이 압권이다. 무심천 양쪽 둔치 뚝방 비탈면과 도로를 따라 노란 개나리꽃과 하얀 벚꽃이 피어난다. 거기에 땅에서 자란 푸른 풀과 수양버들 연꽃빛 신록이 어우러진다. 봄은 그렇게 청주 무심천에 이르러 봄의 삼원색을 완성한다.

청남교에서 무심천 꽃길을 걷기 시작한다. 청남교가 공식 이름이지만 청주 사람들 사이에서는 ‘꽃다리’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꽃다리’ 서쪽 끝에서 무심서로를 따라 북쪽으로 걷는다. 도로 옆 인도가 벚꽃길이다. 무심천 뚝방 비탈면에는 개나리꽃이 만발했다. 둔치에서 올려 봐도, 도로 옆 인도에서 굽어봐도 온통 꽃이다.

모충대교를 만나면 다리를 건넌다. 모충대교 사거리 도로 건너 오른쪽 귀퉁이에 구남주동사무소소공원이라는 작은 공원이 있다. 그곳이 1919년 3월 1일 3·1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작은 표석을 만들었다. 표석에 ‘청주 3·1만세운동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3·1운동 90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1919년 민중들 만세소리 드높던 옛 최전거리 이 자리에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이 표지석을 세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무심천 꽃길을 잠시 벗어나 중앙공원으로 발길을 옮긴다. 중앙공원과 그 주변에 역사의 흔적이 많다.

임진왜란 육지전의 첫 승리, 청주성 탈환

중앙공원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본다. 고려시대 누각인 망선루를 원래의 자리에서 옮겨 지금의 자리에 세웠다. 원래 이름은 취경루였는데, 조선시대 한명회가 망선

청주 3·1
만세운동
표지석



루라고 이름을 고쳤다.

망선루 옆에 청주 척화비가 있다. 1871년 흥선대원군이 전국에 세운 척화비 중 하나다. 석교동에서 하수도 뚜껑으로 쓰이던 것을 발견해 1976년에 지금의 자리에 옮겨 세웠다.

의병장 한공봉수송공비로 발길을 옮긴다.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의병을 모아 일본군과 싸워 33번의 승리를 거둔 사람이 의병장 한봉수였다.

900년 된 은행나무, 압각수를 보면서 고려시대 야사 중 한 장면을 떠올려본다. 고려 말에 이색, 권근, 이승인 등이 청주옥사에 갇혔는데, 홍수가 나자 이 나무에 올라가 목숨을 건졌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압각수 옆에는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이 있다. 청주읍성에 있었던 충청도병마절도사영의 출입문이다. 1651년 충청도병마절도사영을 청주로 옮김에 따라 청주읍성은 충청병영성의 역할도 겸하게 됐다.

중앙공원에 있는 역사의 흔적 가운데 눈여겨볼 것이 있다. 청주 조현 전장기적비가 바로 그것이다. 임진왜란 때 청주성을 탈환한 조현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1710년에 청주성 서문 밖에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에 옮겨 세웠다. 청주성 탈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처음으로 육지전에서 승리한 전투로 기록됐다.

중앙공원 한쪽에 청주읍성의 성곽 일부를 복원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청주읍성의 성곽을 헐고 그 돌로 하수도를 만들고 성문을 헐고 도로를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용화사 삼불전에 있는 7기의 석불입상

중앙공원을 뒤로하고 청주대교로 향한다. 청주 무심천 벚꽃길의 시작은 청주대교에서 제1운천교 사이 약 900m 구간이었다. 60여 년 전에는 보통 어른 종아리 굵기의 벚나무였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의 모습이 됐다.

벚꽃은 꽃잎 하나하나 다 예쁘다. 만개를 지나, 지는 모습도 아름답다. 바람이 불면 일제히 떨어지는 꽃잎은 함박눈을 닮은 ‘꽃눈’이다.

하얀 벚꽃 아래 피어난 개나리꽃의 노란빛이 푸릇푸릇 자라난 풀밭과 어울렸다. 연둛빛 물방울을 머금은 것 같은 수양버들 가지가 낭창거리며 개나리와 벚꽃을 품는다. 늘어진 벚꽃가지가 개나리꽃에 닿으며 하얗고 노란 ‘꽃터널’을 만들었다. 그 시간 그곳은 황홀하다.

청주대교 서쪽 끝에서 무심천 뚝방길을 따라 북쪽으로 걷다보면 왼쪽에 용화사가 나온다. 대한제국 때 세워진

용화사는 7기의 석불에 얽힌 이야기를 품고 있다.

용화사의 역사는 1902년부터 시작된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계비였던 엄비는 어느 날 기이한 꿈을 꾸다. 꿈에 일곱 부처가 나타나 집을 지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꿈이 하도 생생해서 엄비는 꿈에서 본 장면을 이야기하고 그곳으로 사람을 보낸다. 청주 무심천 근처였는데, 그곳에서 석불 7기를 찾아냈다. 그게 1901년 일이다. 이듬해에 석불을 모시기 위해 절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라고 했다.

제국 열강의 침략으로 기울어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엄비의 꿈속 부처에 투영됐던 건 아닐까. 그리고 오랜 세월 묻혀 있던 7기의 석불을 찾아 격동의 역사 앞에 일으켜 세웠던 그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껴본다.

당시 무심천변에서 찾은 7기의 석불은 현재 용화사 삼불전에 있다. 고려시대 것으로 보물 제985호로 지정됐다.

7기의 석불을 마주하고 돌아서는 길, 이곳까지 걸어왔던 무심천 꽃길을 되짚어 걷는다. 화사하게만 느껴졌던 꽃길이 상서롭다. 🍀

글·사진: 장태동(여행작가)

용화사
7기의 석불





공정한 국회뉴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www.naon.go.kr에서 생생한 국회 소식을 만나보세요.

‘가을걷이’와 ‘설거지’, ‘까불이’와 ‘떠버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건을 거두어들일 때 ‘걷다’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이 말은 ‘가을’과 만나 ‘가을걷이’가 되고 ‘설다’와 만나 ‘설거지’가 된다. 사실 ‘설거지’의 어원과 관련하여 ‘거두어 치우다’라는 뜻을 가진 중세 국어의 ‘설다’와 ‘겻다’가 결합한 말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겻다’를 문헌에서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과 의미상 ‘걷다’와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 근거하여 ‘설다’와 ‘걷다’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가을걷이’와 ‘설거지’, 이 둘의 표기가 왜 다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글맞춤법 총칙을 보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표기의 대원칙이 제시돼 있다. 이에 따라 어원적으로 뿌리가 같은 말이라도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할 때가 있고, 소리대로 적어야 할 때가 있다.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하기란 결코 간단치 않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우선 그 말의 원형을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면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설거지’의 경우, 현대 국어에서 ‘설겻다’나 ‘설걷다’를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굳이 어원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가을걷이’는 ‘걷다’라는 말을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을걷이’라고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이러한 예로 ‘떠버리’가 있다. ‘까불이’를 ‘까불다’라는 원래 형태를 그대로 살려 적는 것과 달리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은 ‘떠벌리다’ 같은 형태로 쓰일 뿐, ‘떠벌다’라는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원래의 형태가 뚜렷해도 생산성이 있는 접사가 아니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말에서 ‘이’와 ‘음’은 보편적인 명사형 접미사이므로 ‘먹이, 죽음’과 같

이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러나 ‘마개, 무덤, 주검’처럼 ‘이’나 ‘음’ 외의 접미사가 붙으면 그 접미사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그런가 하면, 그 말에 원래의 뜻이 남아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표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반듯이’와 ‘반드시’, ‘지긋이’와 ‘지그시’는 각기 다른 뜻으로 사용되면서 그 뜻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거나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한다. 알다시피 ‘반듯이’는 비뚤어지지 않은 상태를 뜻하므로 ‘반듯하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다.

반면에 ‘반드시’는 ‘꼭, 기필코’라는 추상화된 뜻으로 ‘반듯하다’와 관련이 없다. ‘지긋이’는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들킨다’라는 뜻으로, ‘지긋하다’라는 원형에서 파생된 뜻을 갖는다. 반면에 ‘지그시’는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을 뜻하므로 원형과 밀접한 뜻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와 ‘지그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밖에도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말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 ‘살살’은 ‘살살거리다’라는 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 말에 ‘이’가 붙어 간사스럽게 알랑거리는 사람을 뜻하는 ‘살살이’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 ‘삽사리’는 ‘삽살이’라고 적지 않는다. 왜냐하면 ‘삽살거리다’나 ‘삽살하다’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로 ‘꿀꿀이, 훌쩍이’와 ‘개구리, 빠꾸기’를 구별해볼 수 있다. 앞의 것은 ‘꿀꿀거리다, 훌쩍하다’처럼 ‘거리다’나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들이고 뒤의 것은 ‘개굴거리다, 개굴하다’로 쓰이지 않는 말들이다. 📖



1969년 4·8항명과 3선개헌

현행 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때로는 정치적 사건으로 번져 큰 파장을 불러오기도 한다.

여대야소의 경우 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여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권력자의 명을 어기고 야당 발의안에 찬성투표를 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하기에 ‘항명(抗命)’이라 부르기도 한다.

제7대국회 때인 1969년 4월 8일, 제69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려 ‘권오병 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됐다. 이른바 ‘4·8항명과동’의 시작이다.

회의가 시작되자 당시 야당이던 김영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권오병 장관을 해임하려는 것은 사학(私學)에 있어서 문교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했지만 사실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권오병 문교부 장관의 사학특별감사와 국회본회의에서 의원을 향해 행한 폭언에 있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회모독이자 경시사상인 만큼 우리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찾아야 한다’며 표결에 찬성해줄 것을 호소했다.

표결결과 총 투표수 152표 중 가 89표, 부 57표, 무효 3표, 기권 3표로 해임건의안은 가결됐다. 해

임건의안 표결에 여당인 공화당 의원 40여 명이 당명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당시 헌법에는 ‘해임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권오병 장관은 해임됐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확대 당간부회의를 열고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행위는 ‘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당행위’라며 숙당(肅黨)을 지시했다. 결국 4월 14일 당명에 불복중한 주동자급 의원인 양순직, 예춘호, 정태성, 박종태, 김달수 의원 등 5명은 당기위원회 결의와 의원총회 인준을 거쳐 제명됐다. 재경위원장이었던 양순직 의원과 상공위원장이었던 예춘호 의원은 위원장직도 사퇴해야 했다.

제명당한 양순직 의원과 예춘호 의원 등의 회고록에 따르면 자신들이 권오병 장관 해임건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3선개헌을 앞두고 이에 반대하던 여당의원들이 권오병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던 3선개헌을 멈추게 하려는 것과 동시에 개헌반대 세력의 힘도 과시하려 했다는 증언이다.

항명과동까지 겪었지만 3선개헌은 5개월 후인 1969년 9월 14일 국회 제3별관에서 변칙처리됐다.

글. 김종해

임시국회와 인사청문회 등 열려

2019. 3. 1 ~ 3. 31

- 1 ▶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권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고 송고한 독립 정신을 되새기는 행사 열려

- 4 ▶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

- 5 ▶ 통일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고 밝혀
▶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 집단 개학연기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검찰에 고발

- 6 ▶ 문희상 국회의장,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미세먼지 관련 법안 처리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 주문
▶ 법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조건부 허가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가재난사태’ 선포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혀

- 7 ▶ 문희상 국회의장, 제367회국회(임시회) 개회사에서 “국회다운 국회, 국회개혁을 위해 분골쇄신하자”고 강조

- 8 ▶ 문재인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 장관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 최정호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해양수산부 장관에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 내정

- 11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 협치 강조
▶ 전두환 전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출두

- 12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 발언해 한때 파행
▶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열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강도 높게 규탄

- 13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 국회, 본회의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을 의결

- 14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 논의와 관련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조속히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마련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
▶ 민갑룡 경찰청장,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남 클럽 ‘버닝썬’ 등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보고

- 16 ▶ 문재인 대통령, 6박7일 간의 아세안 3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

- 18 ▶ 행정안전위원회,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19 ▶ 국회, 3월 22일까지 본회의 열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실시

- 20 ▶ 문재인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명

- 21 ▶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3명 전원 사퇴
▶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 등 2곳에서 치러질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 25 ▶ 국회, 3월 8일 장관에 내정된 7인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
▶ 법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영장청구에 대해 기각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

4월 국회문화행사



국회문화극장

<증인>

- 일 시 : 2019. 4. 18 (목) 오후 7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출 연 : 정우성, 김향기, 이규형, 염혜란, 장영남, 정원중, 김종수 등
- 예 약 : 국회문화행사홈페이지(<http://culture.assembly.go.kr>)를 통해 4월 10일부터 예약 가능 (1인 최대 2인까지 예약 가능)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3111~2



국회아트갤러리 작품전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 3>

- 기 간 : 2019. 4. 3 (수) ~ 2019. 4. 29 (월)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 전시품 : 연호석 <줄기> 등 회화 20점
- 문 의 :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02-788-2296

임시의정원 100년의 미래

국회 본관 옆 의원동산 한켠 화합의 꽃밭에는 복수초에 이어 동강할미꽃이 힘차게 피어 납니다. 2009년 4월 전국 각지의 자생화(한국 야생화)를 모아 조성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동자꽃, 율판나물, 앵초, 자란, 용담, 감국 등 새 생명들이 개성미를 억누르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화합의 기운을 선사합니다.

화합의 꽃밭에서 복수초가 필 무렵 두달간 헛돌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초반 여야의 격한 충돌이 있기는 했지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일부 민생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표류하던 국회가 그나마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점은 평가해야 할 듯합니다. 좀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다수의 전문가와 국민들은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앞으로 여야가 정당 내부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불꽃 튀는 1년이 될 것으로 우려합니다. 반드시 그럴까요. 모든 생명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맹관계이듯이 여야 공존공생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국회 정당 대표자 연설 등에서 ‘내가 나를 업신여기면 남도 나를 업신여긴다’는 뜻의 자모인모(自侮人侮)라는 맹자의 말을 새겨야 하는 상황이 가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초월합니다.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하다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품격은 국회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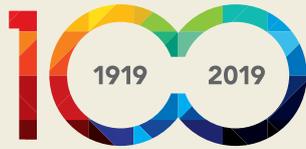
천년 거목 금강송도 시작은 초라한 소나무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 씨앗이 낙엽이나 동물의 변 등 영양분을 섭취해야 거목으로 성장합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큰 재목이 될 수 없습니다. 여야는 뜨겁게 경쟁해야 하겠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독이는 공생관계를 복원해야 할 듯합니다.

이번 호 국회보는 ‘임시의정원 100주년, 그 의의와 과제’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모태인 임시의정원 탄생 과정을 조명했고, 제헌헌법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관련성 등도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국회의 전신인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 모여 설립했습니다.

임시의정원은 먼 이국땅에서 구성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나라없는 설움 때문에 1945년 광복을 맞아 지도부가 개인 자격으로 환국할 때까지 길위에서 보낸 세월이 아주 길었음을 아는 이는 적습니다. 임시의정원을 세우고 지켜주신 분들의 노고를 기억해 새로운 100년을 기약해야 할 것입니다. 🍵



이훈규
홍보기획관·편집인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국회 경축행사



경축행사

4.10(수)
10:00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

국회의사당 중앙홀

- 홍진 의장 흉상 제막식 및 기념 전시실 재개관식
국회도서관 홍진 의장 기념 전시실 앞(기념식장 생중계)

4.9(화)
9:30-17:20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

4.6(토)~4.7(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국회개방행사

국회잔디광장

3.21(목)
19:00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문화극장 창작판소리 『백범김구』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방송/전시

4.10(수), 4.17(수)
11:00

임시의정원 100주년 특별기획 『국민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다』

국회방송 (50분 다큐멘터리 2부작)

3.6(수)~9.25(수)
매주 수 9:00

임시의정원 100주년 연중기획 『대한민국! 100년의 유산』

국회방송 (15분 다큐멘터리 30부작)

3.1(금)~4.5(금)
매주 금 8:50, 토 9:00

『열린국회 시민 아카데미-임시의정원 및 독립운동사 강좌』

국회방송 (50분 토크콘서트 6부작)

4.5(금)~4.11(목)
11:00-20:00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홍보관

여의도 윤중로 (국회7문 헌정기념관 출입구 앞)

4.3(수)~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 특별전

국회헌정기념관 기획전시실





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